

수구세력의 가시화조치 10.8발표 나올 땐
이미 양군모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격렬한 투쟁없이 문민정부 사모한 것 전술적 실수
자유는 민중의 피땀으로 이뤄지고
해방은 승리에서만 전취할 수 있는 것
오류를 깨닫고 순간의 아픔을 오기와 결의로 일깨우며
다시는 이런 아픔 겪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분노보다는 차라리 격분
한숨보다는 폭발로
11.1열성자 대회 고대에서 새출발로 맞받았다.

10.8국방부 3%구제안은 더이상 한숨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정치적 힘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것
물리적임을 가져야만 정치력은 담보 되는 것
잊지 않았다.
신중하게 응골차게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처럼
승리의 확신 한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KNCC농성장을 수염투성이들이 사수하고
각지의 대상자들 향해 발로 뛰고
고지식할 만큼 주관 강한 교수님 1380분 서명 받아내고
하늘만 같았던 168명의 국회의원 서명 받아냈을 땐
이젠 됐구나는 자만심도 있었다.

여섯시 기상은 자연스런 규율로 세워지고
농성대오는 견결하게 유지되었다.
초겨울 바람의 일주일 마포농성
한겨울의 여의도로 옮긴 뒤
국방부 새벽전투 사수 두달
지겹지도 않았다.
정연한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로 세워지고
규율은 승리를 위한 의지로 자연스레 각성 되었다.

대상! 문민정부

동력 양군모에 동의 하는 모든 사람.
등대는 과거청산 부당징집 철폐!
나침반은 양심수 군문제 해결!
몸짓 하나하나는 투쟁의 무기가 되고
모든 가능성은 투쟁으로만 열린다.

정치전을 중심으로
군부독재 과거청산!부당징집 철폐!
양심수 군문제 해결하라!
국회청원 여야합의 만장일치 통과!
대교협 교수 1천 300여명,기자회전!
성직자,여성계 2천2백 명 서명,기자회전!

물리력을 바탕으로
수십명 부터 1천까지의 수십번의 집회!
새벽출근전투!선전선!장기농성!

한들 불씨 없는 살에이는 한파도
이간책동,회유도,저항도
정열의 청년패기 꺾지 못했다.
저들의 단순청원처리 기만적 태도는
군부독재 과거청산의 정치적 문제로 되고
양군모 국방부 싸움 아닌
양심세력 대 수구세력의 한판 싸움
군회피 아닌 정치도덕적 싸움

물러서기엔 너무도 억울하다.
누가 이기든 승부처는 이곳
정당성 하나만으로 시작한 싸움
마침내 하늘을 뚫고
2.16 국방부 발표 전술적 승리에
절코 들떠 잊지 만은 않았다.

전술적 승리는 이미 청년의 손에 들려있고
완전한 승리는 조국의 가슴에 있다.

우리와 동지들의 눈물, 피, 온갖 설움 어찌 잊으랴
그토록 요원했던 정치도덕적 승리는 하늘 향해 열려있고
그 하늘은 순결한 양심수의 가슴에 담겨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두의 웃음으로 기쁨을 나누는 것
순간의 승리는 마약과도 같다.
영원한 승리는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만 존재한다.
그토록 소중했던 은빛 파이프
거리마다 흘린 피에 우리 승리의 가치가 있다.
당당한 심장으로
이 승리를 평생의 삶으로 전개하는 것만이
양군모 투쟁을 순수하게 간직하는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청년양심수의 내일
나의 삶과 조국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청년 양심수의 영원한 승리
양군모의 진정한 승리다

선명 남짓 여의도 농성장
뒤돌아 떠날때 후련키도 하겠지만
누가 떠나면서 정다운 눈길
다시 한번 보내지 않을 수 있으랴
이것이 이별이 아님을 알고
더 소중한 만남이란 것 알기에
내일은 우리의 목표요 전부다.
단 하루를 살아도
새삶의 출발점 각인하며
우리를 추억의 과거로만 떠올리지도 말라
당당한 투쟁의 동지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펼쳐질 반도조국에 다시 휘날려라
신화의 깃발 양.군.모

양군모



양군모가 누구지?

● 김성중 ●
세종대87, 작가

이제 빵집이들도 운이 트였다. 천상도 지하도 아닌 곳에서 중음신처럼 떠돌던 군도바리꾼이 이땅의 주민으로 살 권리를 얻었다. 외상술 마실 신용카드를 되찾은 것이다. 평생을 쫓겨다녔다는 해월도 있지만 형사끄나폴도 아닌 동사무소 병무계에 평생을 쫓겨 다니긴 정말 싫었다.

이제 골목길 어귀에서 또각또각 들리는 구둣발 소리가 두렵지 않다. 오뉴월 뚱강아지처럼 슬금슬금 경찰을 결눈질하지 않아 좋다.

농성장에 취업공고가 나붙기 시작했다. 몇몇은 데모하느라 내팽겨쳐 두었던 책가방을 메고 강의실로 발길을 옮기고, 공장으로, 농촌으로, 민중속으로 새삶을 건설하러 떠났다..... 그러나 아직도 막바지 투쟁이 남아있다.

양군모 1년! 우리는 기어이 해내고야 말았다. 마치 태산에 오른 심정이다. 정상에 올라 정상적 사회복귀를 이루나니 세상이 모두 내것만 같구나!

발아래를 굽어보니 골짜기마다 고개마다 정겨운 이야

기들이 가득하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양군모 야사라 부른다.

뒀다 양군모

1월 10일, 건국대 학생회관 2층, 구석진 골방 인권위원회 사무실. 여나쁜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강제징집 철폐 투쟁위원회를 계승하여 새시대, 새로운 감각에 걸맞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새세대 학생운동의 1세대답게 87학번 세 명이 상근의 결의를 내왔다. 먼저 결의를 밝히면 선배들도 모두 함께 하리라 내심 기대했을 터. 그러나 어찌랴, 그것은 오판이었다. 선배들은 뒤에서 도와주겠다는 말만을 남기고 홀연히 뒷걸음질 쳐갔다. 허탈해진 87.

그러나 힘을 내자. 우리가 양군모를 이끌어나가자! 이튿날 그들은 윤석양후원사업회에 빌붙어 책상 한 개를 얻는 데 성공했다.

양군모는 식당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양군모의
백수건달 기질은 커나갔다

아! 김의연

세명이 근근히 이어가던 양군모의 숨통이 트였다. 36사면으로 예비양군모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 것이다.

상근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으로 36사면자 환영대회장으로 득달같이 달려갔다. 그리고 민가협 총무님에게 사정사정하여 쥐꼬리만큼이지만 양군모의 발언시간을 얻어내었다. 누구를 발언자로 세울까? 대표? 아니야, 대표보다는 사면자 중의 한 명이 더 상징적이지.

누가 보더라도 군대가기엔 너무 억울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징역도 오래 살고 나이도 웬만큼 든 그런...

김의연. 외대88.서반아어 전공. 정원식 폭행사건, 징역 합산하여 2년2개월. 그가 적격이었다.

행사는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해후의 정을 나누느라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고 있었다. 몇몇은 행사장을 슬슬 빠져 나갔다. 故 문익환 목사님의 감동 진한 말씀이 끝난 뒤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러나 행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드디어 우리차례가 되었다.

김의연, 그는 연단에 당당한 모습으로 섰다. 양군모의 정당성에 대해 역설하고 또 역설했다. 그리고 또 되풀이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하고 또하고 자꾸만 되풀이하고 짧게 하라고 연신 손짓을 보내던 사회자도 이제는 지쳤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막연한 눈길로 연단을 바라보고 있다. 결국 입장연설은 끝났다. 사람들도 다 떠났다. 다음 순서 연사인 김근태 선배도 짧은 인사말만을 남긴 채 연단을 내려왔다. 그의 손엔 20분 분량의 연설문이 들려 있었다. 텅빈 행사장에는 세 명의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아! 김의연.

윤후사에 빌붙어 살던 시절.

귀다 놓은 보릿자루같았던 상근 3인은 눈치밥 몇끼만에 기어이 사무실 전체를 장악하고 만다. 사무실은 반핵평화운동연합, 그리고 평화연구소, 윤후사가 함께 쓰고 있었는데, 각 단체의 컴퓨터란 컴퓨터를 모조리 장악했고, 복사기, 전화할 것 없이 양군모가 아예 전세를 내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양군모는 식당을 완전 점거하는 데 성공하였다.

어느날 김정훈 대표는 평화연구소 선배가 저녁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밥을 모조리 해치우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좋았다. 실수를 자각한 김대표는 라면이라도 끓여드려야겠다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라면을 끓였다. 그 평화연구소 선배는 말없고 날카로운 성격으로 소문난 선배였다. 라면을 드실 리 만무했다. 역시 결과는 “됐어요!”라는 거절과 광하고 단히는 문소리였다. 김정훈 대표는 순간 썰렁했지만 금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라면 두 개마저 해치우고 말았다. 그렇게 그렇게 양군모의 백수건달 기질은 커나갔다.

웬 족구장?

양군모는 5,6월 임시국회에 맞춰 투쟁의 고리로 국회 청원을 채택했다.

국방상임위가 열리는 시기에는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했다. 전국의 회원 약 50명 정도가 이 농성에 참여했는데 모두 쟁쟁한 투쟁경력을 자랑하는 역전의 용사들이었다. 양군모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름대로 한칼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이면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엉뚱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민주당농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화는 소위 ‘족구장 사건’이었다. 앞서 한칼했던 김의연이 그 주역인데 당시 그는 농성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다. 농성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일정이 아침운동이라 김의연은 운동할만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대략 고수부지 정도를 예상했는데, 역시 예상대로였다. 김의연은 족구하기에 아주 좋고 차도 안 다니는 족구장이 있다며 자신있게 농

성대를 인도하였다. 차도 안 다닌다는 말이 좀 아리송했지만 - 족구장인데 웬 차?- 들뜬 마음으로 마포의 새벽을 가르며 족구장으로 뛰어갔다. 조금 먼 거리였지만 푸른 잔디가 깔린 족구장을 생각하면 절로 힘이 솟았다. 이윽고 한강이 보인다. 민족의 젖줄 한강! 신선한 새벽공기를 마시며 조깅을 하는 사람, 배드민턴을 치는 노부부의 모습, 자전거를 타는 처녀의 황홀한 자태. 당연히 있어야 할 이런 장면은 전혀 볼 수 없다. 덤프트릭 한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기우뚱거리고 있을 뿐. 그 차가 다니는 길이 바로 족구장이란다. 차가 잘 안 다닌다더니, 찾길은 찾길인데 별로 안 다닌다는 뜻이었던가. 우리는 그날 한강물에 축구공 한 개를 빠뜨리고 돌아왔다.

우린 전과잔데...

양군모는 운동을 참 좋아한다. 88학번 모학우는 운동권 출신이라 운동을 좋아하는게 아니냐며 나름의 견해를 조심스레 제출한 바 있다. 어쨌거나 농성기간 중에 우리는 아침운동은 물론이거니와 휴일이면 어김없이 체육대회를 열었다.

아마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을 게다. 장소는 서강대 운동장, 양군모의 첫 체육대회였다. 하늘도 이를 축하하려는 듯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햇볕은 따사로웠다.

첫 시합은 86대 87의 축구시합. 대충 차놓고 무작정 뛰는 동네축구의 전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한판이었다. 그러나 유독 돋보이는 한 선수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최정식. 일명 마라도나. 땅딸하고 다부진 체격이 영락없는 마라도나였다. 중형무진으로 개발 수비수를 따돌리는 돌파력은 가히 일품이었다. 그런데 체격이 마라도나와 똑같은 선수가 또 한 명 있었다. 그는 정현태. 하지만 누구도 그를 마라도나라고 부르지 않았다. 몸집은 마라도나인데 실력은 개다리 배삼룡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우리는 가짜 마라도나라는 의미로 가라도나라고 불렀다. 그래도 묘기축구에서는 마라도나보다 한 수 위였다. 등으로 백헤딩(?)을 하는 등 상상을 불허하는 묘기로 주위를 경악케 했다.

“우리를 전과잔데
얼마전에 출소했다.
농구장 짐 쓰자”

다음은 농구시합이다. 농구장은 여러 팀이 서로 뒤엉켜 북적였다. 어떻게 농구를 할까 고민을 하던 중 마침내 대표가 나선다. 설마했는데, 농구장에 있는 몇몇 사람을 만나 뭔가를 얘기하더니 다들 농구장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라. 농구장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빠졌다. 어떻게 했길래? 대표 왈, “우리를 전과잔데 얼마전 출소해서 좀 놀러왔다. 농구장 짐 쓰자, 했더니 비켜주대”

우리는 그날 전과자의 특권을 마음껏 누렸다.

딜레이 그리고 내성적

농성중 병무청 집회가 있던 날 아침. 병무청의 한상태 사무관이 농성장으로 친히 찾아왔다. 집회를 취소해 달라는 이유에서다. 대표단이 그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무관은 한사코 전체 앞에서 설득을 하고 싶다고 졸랐다. 그 내용이야 그렇다치고 사무관은 양군모에게 큰 실수를 했다. 영어를 쓴 까닭이다. 우리가 집회를 하면 우리 문제가 delay된다는 어쩐지, delay가 도대체 뭘 소리여? 이후로 양군모에 delay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 아무튼 양군모의 집요한 투쟁에 병무청이 똥줄이 났나보다.

1차 민주당사 농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행어는 ‘내성적’이라는 말이다. 토라지거나 분위기를 못 맞출 때 우리는 내성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원래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게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농성대 내부의 독특한 유행어였기에 농성대원들끼리는 그말을 주고 받으며 길 길델 수 있지만 다른 집단에 가면 도대체가 뜻이 통하지

오늘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양군모'씨냐,
'양군모'씨냐?

않았다. 89학번 모학우는 아버지가 데모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는 말씀에 '아버지 참 내성적이십니다'라고 하여 다리 몽당이 부러질 뻔했다고 한다. 어쨌든 민주당 1차농성은 오랜 징역살이로 인한 학내에서의 소외감(?)을 털어내는 소중한 자리였다. 전과자의 마음은 전과자가 알아준다고 했던가? 86학번 김성구 동지는 부당징집이고 뭐고 이곳에 오니 마음도 통하고 편하기 그지없다며 농성장에 오는 이유를 색다르게 표현하기도 했다. 정서적인 통일은 이후 양군모 싸움의 중요한 밑거름이었다.

백수 그리고 폐인

농성이 성공리에 끝난 뒤 병무청은 전원면제를 내용으로 한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의 주인이 따라야 했지만 거의 해결될 듯한 분위기였다. 병무청도 국방위원장도 정부장관실도 한결같이 낙관적이었다. 양군모의 오기형 기획실장도 이에 편승, 7월말 동국대에서 열린 총회에서 99%해결되었다는 뽕을 튀기기도 했다. 그런데 병무청은 계속하여 1주일만 1주일만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조금 미심쩍은 구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순진한 양군모는 그래도 문민정부를 믿었다.(이후 이 부분은 철저한 비판을 받았다)

양군모 상근자는 심하게 말하여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였다. 결과를 낙관하고 있었기에 그럴 수밖에. 사실 마냥 기다린 것만은 아니다. 당구도 치고, 술도 먹고, 우르르 자취방에 몰려가 심야 비디오도 봤다. 그런 우리를 스스로 백수라 칭했다. 그런데 백수생활도 한계가 있는 법. 돈도 떨어지고 놀일도 마땅찮고, 몇몇 상근자들은 사

무실 소파에 앉아 빙고게임을 했다. 영화제목을 적어놓고 지우는 그런... '빼꾸기 밤에도 우는가', '앵무새 온몸으로 울었다', 갖가지 영화제목이 튀어나왔다. 이를 들은 평화연구소의 후배의 따끔한 일침 "양군모 폐인됐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땐 참 힘들었다.

양군모가 누구냐?

한편 지방에서는 어떻게 지냈을까? 지방조직들은 대부분 서로 연락을 해서 가끔씩 모이는 수준이었는데 '지방조직의 모범 청주'는 사정이 좀 틀렸다. 사무실도 내고 기자회견도 준비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양군모씨냐, 양군모씨냐"며.

양군모의 당당한 위세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 우리는 그런 수모를 참아야 했다. 이제 웬만한 단체에 가면 양군모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양군모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까지 우리는 술한 고생을 해야만 했다.

조금 뒤의 얘기지만 전국 동시다발로 병무청 항의방문을 간 적이 있었다. 지역의 모범 청주는 30여명이 참가하는 쾌거를 이룩했지만, 지방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은 겨우 3명이 항의방문을 하는 길에 나섰다. 그래, 열악한 사정 때문이라 이해해두자. 그런데 두 명이 대표단으로 면담에 들어가고 한 명이 밖에서 본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가관이다. 훗날 2차 민주당 농성에서 고령화된 농성대에 젊음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열심히 투쟁했던 광주전남 지역이지만 그때는 참 너무했다. 안그래?

양군모 MLM이냐?

시행령 개정이 계속 딜레이 되자 곳곳에서 유언비어가 창궐했다. 어느 학교에서는 모두 군면제가 되었다며 축배를 들기도 하고, 날쌔다고 군대갈 준비나 하하던 학교도 있었다 한다. 중앙상근들도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이대로 끝나면
평생 폐인으로 살거요

못 내다보는 상황에서 각 학교,지방은 정말 오리무중이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 지방,학교책임자들의 고충이 무척이나 컸다. 10만원의 회비를 걷으면서 면제될 거라고 잔뜩 뽕을 튀겨냈는데, 웬걸 돌아가는 꼴이 X되는 분위기다. 그래 몇몇 사람들로 부터 양군모가 MLM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10만원 = 면제? 의심을 받을만도 하다. 조직전체가 한데 모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성과를 공유할 필요를 절실히 깨닫던 시기였다.

다시 시작이다!

운명의 10월 8일. 결국 우리는 패배의 쓴잔을 마시고야 말았다. 그 즈음에 가서는 모두들 그렇게 되리라 대중은 예상은 했지만 패배의 충격은 너무나 컸다. 다시 싸울 것인가? 싸우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중앙상근과 강집대책위 출신들이 모인 비상회의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체로 중앙상근의 분위기는 할만큼 다했다, 패배를 인정하자는 분위기였고, 강집출신들은 다시 한번 싸워보자는 견해였다. 그러나 대세는 대표가 속해있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일대 역전극이 벌어진다. 영광의 주역은 오인근, 일명 찰스. 그는 이대로 끝나면 평생 폐인으로 살 거라며 중앙 상근들의 약점을 공격했다.(폐인! 몹시 찢리는 말 아닌가?) 군에 가는 건 두렵지 않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찌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으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죽대와 자존심뿐이다. 그 술한 역경속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건 자존심이었다. 동지들 내 자존심을 지켜다오... 감동적인 호소가 끝날 무렵 대세는 이미 넘어가 버렸다.

그래 싸우자, 지더라도 끝까지 싸워보자!

뽕의사

지더라도 싸워보자니? 양군모는 이런 말을 싫어한다. 우리는 80년대의 문제제기식 투쟁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으로 실제 성과를 내오는 투쟁으로 전화를 꺾한

지 오래다.

반드시 이기기 위해선 단결된 조직력과 정치사상적 무장이 절실했다. 바로 이때 노태술 선배가 한칼을 뽑았다. 소위 뽕의사라는 역할이었는데, 이 선배와 단30분만 이야기하면 뽕을 맞은 듯 펄펄 날면서 투쟁에 임하는 것이었다.

뽕환자는 날로 늘어났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징집영장을 병무청에 내던지질 않나, 몇 주 동안을 지방으로 돌며 조직사업을 하지 않나, 일만 인 서명, 5천명 집회의 기획안을 마구 남발해대질 않나... 뽕을 맞으면 6.3빌딩이 성냥갑만하게 보인단나?(양군모는 향정신성 환자들과 같이 징역을 살아봐서 이에 대해 훗하다)

양심수의 자존심을 건'마지막 승부'였기에 우린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었다. 통큰 사고, 일사불란한 조직,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우리는 싸움을 다시 시작했다.

3년 묵은 쌀

국방부, 병무청의 기만적 작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첫 과제로 제기되었다. 강집출신들과 영장반납 투쟁자들이 보강된 상근대오는 즉각 KNCC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밤낮없는 고된 일정이었지만 뜨거운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차가운 바닥에 담요 한 장 덮는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불평하는 소리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밥이 문제였다.

왜리리 밥이 딱딱한지. 양군모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 못 참는다.식사당번에 대한 원성이 드높았다. 물 하나 제대로 못맞추냐고. 그러나 물을 생각보다 많이 부어도 결과는 매한가지였다. 전기밥통이 잘못되었나? 가스렌지에 해도 마찬가지. 정말 울화통이 뻗칠

**엄상국은 얼굴 때문에
그수님 서명을 100여분이나 받아낸
상원이영**

지경이었다. 매 끼니마다 생쌀을 씹는 고역을 겪으며 우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그래 쌀이 잘못됐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쌀은 3년이나 묵은 쌀이었다. 이젠 누가 이 쌀을 사왔느냐가 문제의 초점이 되었다.

하루가 가고 이들이 가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양군모에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다니!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얼마후 이훈구 사무국장은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고야 만다. 그런데 범인은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다. 평소 후배들에게 신망이 높았던 85학번 이상봉 선배였던 것이다. 상봉이 형은 이 사건으로 위신이 땅에 떨어졌고 그야말로 붕이 되었다. 그후로 그는 오렌지쥬스 사건, 새우깡 사건, 아라비안 나이트 사건 등 술한 일화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된다.

교수서명 1500돌파!

중앙 상군이 KNCC에서 농성하고 있는 동안 각 학교에서는 교수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지방 조직국은 지방을 순회하며 서명사업을 독려하기도 했다. 장어 꼬리구이 등을 얻어먹으며 그야말로 강행군을 했다. 중앙에 있는 서명 상황판의 숫자가 날로 늘어갔다. 그리하여 사상 유례없는 교수 1,500여분 서명을 받는 데 성공했다.

양군모의 신화 그 첫번째라 하겠다.

우린 정말 세일즈맨처럼 뛰어다녔다.

자기 과전 다른 과전 혹은 다른 학교건간에 무조건 문을 열었다.

교수님들의 태도는 천차만별이었다. 대부분은 우리의 뜻에 공감하여 흔쾌히 서명을 해주셨지만, 몇몇 분은 무

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제자를 믿어서 그냥, 안해주면 뭇일을 저지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때로 군대에 가서 사람 좀 되라고 타이르시기도 했다. F가 나와도 교수님 한번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참 많이 변할려고 노력했다. 양군모는 사제지간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데도 일조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서명사업이 잘 된 것은 아니다. 교수님들에 대한 거리감으로 인해, 그리고 설마 해줄까하는 교수님들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다고 본다.

경희대 회원들이 학내투쟁 때문에 교수님들과 사이가 나쁘다며 세 장이 한계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보고했을 때다.

이에 격분한 조직국장 찰스는 경희대를 직접 방문, 하루만에 네 분의 서명을 더 받아오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진대 경희대 친구들이 또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그후 경희대는 38분의 서명을 받아내고야 만다.

교수서명 사업의 영웅은 단연 경남대 85학번 이상원 선배이다.

혼자서만 100여분의 서명을 받았다. 비결을 물어봤더니 자기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또 교수회관에서 아예 살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주위의 평은 그 험상궂은 얼굴 때문이 아니었겠냐는 것으로 모아졌다. 교수님들이 무서워서 서명을 해줬을 거라나 어쨌다나.

양군모의 밤

교수서명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우린 장기적 농성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각 지방에서 농성대가 밤을 도와 상경을 했고,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로 농성장을 옮겼다. 문제는 이 인원이 몇 달을 버틸까 자금이었다. 결코 적지 않은 회비를 건넸지만 그 걸로는 턱도 없었다. 양군모는 또 하나의 신화를 창조해 내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다.

양군모의 밤! 바로 거기야.

‘양군모의 밤’은 ‘잘나가는’ 사무국이 준비 주체가 되어 약 한 달간을 고생고생하여 만들어 낸 작품이었다. 처

**선배님
그 꽃도 파는 거예요**

음에는, 많이 팔아보자고 모두들 결의는 내왔지만,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건비나 뺄 수 있을까 하는 눈치들이었다.

한데 막상 뚜껑을 여는 순간 그런 우려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시작부터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고 술달라, 안주달라 아우성이었다. 자리가 없어 돌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복도에 신문지를 깔고 술을 마시는 술꾼들도 있었으니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사무국장님은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교시를 내리셨다. 사회자는 멘트 도중 “건배”를 수십차례 외쳐야 했고, 나르미들은 술잔이 비기가 무섭게 메뉴판을 내밀거나 매정하게 탁자를 치웠다. 그래 쫓겨나지 않으려고 수십만원어치 술을 마신 테이블도 많았다는 뒷얘기도 남는다.

결과는 대성공. 순이익금이 무려 천만 원을 넘었다. 일일주점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위업을 달성했던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날 오신 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양군모의 승리로 이를 갚았다고 착각해보며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런 말씀을 전한다.

수익사업하러 나오셨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여러 차례 수익사업을 벌였다. ‘굴에서 풀로, 풀에서 술로!’ 사무국에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한 가지 일을 해도 끝장을 보고야 마는 양군모의 성격상 양군모는 철저히 장사꾼으로 변신하였다. 이제까지 맺어왔던 풍부한 인간관계가 전부 돈으로 전화되는 현상을 빚기도 했다. 사람들은 몸살에 걸려 나가 떨어졌지만 장부의 동그래미는 날로 늘어만 갔다. 역시 짭짤한 재미를 봤다. 이 때문에 양군모를 수익사업 단체로 보는 시각도 생겼다고 한다.

웃지 못할 일화 한 토막---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다.

제야의 꽃은 일을 도맡아 하던 양군모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던 날 저녁부터 빈소에 찾아가 이런저런 일을 도

왔다. 몇몇은 빈소에서 헌화할 때 쓰는 국화꽃을 조문객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맡았는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한다. 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양군모 회원임을 알아본 K대 모학우가 황당하게도 “꽃 팔러 나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허탈하기도 하면서 일면 수익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랬거나 위안도 됐다. 우리가 야멸차게 수익사업을 한 건 생존의 문제였다고 강변하고 싶다. 물론 수백만원짜리 광고를 내는 데 상당부분을 썼지만 하루 2십여만원에 이르는 농성비가 사실 너무 벅찼다. 그래서 하반기에 재정담당을 맡았던 윤상국은 날이면 날마다 돈타령을 늘어놓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점검회의 때마다 농성자금이 다 떨어졌다며 수익사업, 모금사업을 잘하자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호소를 했는데, 하루는 집행부들이 담합하여 재정사업에 뜻미지근한 동지들에게 극약처방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데 연출은 좋았으나 배우가 영 아니었다.

잔뜩 분위기를 잡고 대표가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한 것까지는 매우 좋았으나 이후 구체적인 재정보고를 하면서 재정담당 윤상국이 통장에 7백만원(광고비)이 있다는 실언을 하여 김을 뺏고, 광고를 안내고 이 돈을 생활비로 쓰더라도 하루에 15만원씩, 5일이면 바닥이 난다고 아주 심각하게 호소를 했다. 순간, 농성장은 폭소의 바다가 되었다. 15만원 × 5 = 700만원? 실수를 깨달았던지 상국이는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듯 하더니만 다시 10일쯤 지나면 돈이 바닥나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수정, 주위의 동의를 구했으나 장내는 견잡을 수 없는 폭소의 태평양이 되고 말았다.

그날 집행부의 음모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혁명적 학번관에 충실한 명수,
양군모 신화의 원동력

맹수야 튀라!

양군모는 집회도 참 많이 했다. 서울시경의 모 간부는 양군모가 1993년도에 가장 많은 집회를 했고, 그때마다 평화적으로 질서를 잘 지켜주어 표창장이라도 주어야겠다며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한다. 과거 집시법 위반과 폭력시위(?)의 주범들이었던 양군모 회원이 일년 내내 집시법을 준수하느라 참 많이도 자제했다. 뭐 자제?

집회를 떠올리면 국방부 아침전투도 기억에 오래 남고, 그때마다 동참했던 정체불명의 아주머니도 빠뜨릴 수 없지만, 뭐니뭐니해도 대학로 '12.4 집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지방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면서까지 기를 쓰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대략 1천여명! 뿔뿔이 뿜으면서 5천명을 큰 소리쳤던 것에는 좀 못 미치지만 100여명이 고작이었던 이전의 집회를 열배 이상 뛰어넘는 쾌거였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메우고 집회는 시종 들뜬 분위기로 힘차게 진행되었다. 고 문익환 목사님의 감동스런 연설

도 기억에 새롭다.

그럼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서 집회준비 때의 일화로 넘어가 보자.

집회에 필요한 연단과 마이크 등은 당일 성군관대에서 준비하기로 했는데 집회준비팀은 아침 일찍부터 성군관대로 출발했다.

성대출신의 회원을 만나 물품을 손수레에 가득 싣고, 가파른 언덕을 경남대 88학번 정명수는 힘차게 달린다. 같은 학교 85학번 이상원 선배는 그런 명수의 모습을 보고 촌놈 신났다고 농평을 한다. 그런데 일이 발생했다. 정문에서 수위 아저씨가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성대회원이 따라나오지 않아 우리가 누군지를 보증해 줄 사람이 없었다. 수위실에서 총학생회로 전화를 걸었지만 하필이면 그때 총학 간부가 화장실에 갔었나 보다. 그때였다. 전화기를 들고 찢절때는 순간 이상원의 입에서 양군모 야사에 길길이 날뛰는 명언이 터져 나온다.

“맹수야 튀라!”

아, 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적절한 상황판단인가! 맹수는 혁명적 학번관에 충실한 사람이다. 튀도 안 돌아오고 튀었다.

이러한 혁명적 학번관에 입각한 선후배 관계의 모범이야말로 양군모 '불패의 신화'의 원동력이었다.

이병태 대통령 각하

94년 1월로 넘어오면서 그 팔팔하던 농성대오는 결국 지치고 말았다.

올해를 넘기지 말자고 그렇게 결의했지만 무정한 갑술년의 새해는 밝아왔다. 신정연휴를 지내면서 농성대오의 수가 현격히 줄었음은 물론이었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그저 기다려 보자는 정서가 팽배했다. (이때 조직국은 '분임조를 복구하자! 분임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건을 되풀이해 내곤 했다.) 그러나 작년 7.8월의 교훈을 잊었는가? 앉아서 기다리다 쓴맛을 본 지가 불과 몇 달 전인데 ...

청와대에 보낸 촉구문에
원 “이병태 대통령 각하”?

양군모는 성직자 5천명의 서명을 계획하고 당장 실천에 옮겼다. 일단 사업에 임하자 특유의 조직력과 기민한 활동력이 되살아났다. 결과는 역시 대성공. 2천여명의 목사님, 스님, 신부님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 양군모가 널리 알려져 서명작업은 대체로 순조로운 편이었다.

서명작업과 함께 전국의 각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등의 대정부 촉구편지 사업도 진행되었다. 우리에게 대한 지지와 관심이 드높아 다들 잘 도와주었다.

그런데 옥의 티 정도가 아닌 중대한 실수가 발생했다. H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청와대로 보낸 촉구문이 바로 문제의 괴문서였다. 촉구문의 내용이야 물론 좋았지만 수신인이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이병태가 아닌가!

이병태 대통령 각하라니---

팩스로 양군모에 사본을 보낼 시간이면 잘못을 발견했을만도 한데,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 우리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하더라도 아부가 너무 심했다. 해도해도 너무 했다. (아마 청와대와 국방부에 함께 촉구서한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겠지)

농성100일

농성 100일을 맞는 양군모는 남다를 감회에 젖었다. 지나온 성과도 성과려니와 한술밥을 먹으며 쌓아온 우정이 무척이나 정겹고 자랑스러웠다.

백일인데 그냥 보낼 수 있으랴. 사무국의 제안으로 농성백일잔치를 성대하게 벌였다.

그동안 고생 많았던 대표에게 87학번 동기들이 돈을 모아 운동화 한결레를 선물하는 호뜻한 정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다음은 양군모 영웅상 각 부문 수상자들이다. 먼저 농맹이상에 이현찬. 1차 민주당 농성에서 MVP였던 그가 이번에는 농맹이상으로 내물렸다. 경합자 없이 거의 압도적으로 당선.

밥상은 역시 예상대로 이훈구의 차지였다. 그는 평소, 밥은 조금씩 여러번에 걸쳐 먹어야 한다며, 코펠로 하나

가득씩 여러번에 걸쳐 먹는 노련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다음은 농성윤기상. 여러 사람이 후보에 올랐으나 새벽부터 농성대원을 깨우면서 고생을 했던 규율부장 병욱이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마지막 MVP는 주최측의 실수로 대표에게 돌아갔는데 부상으로 이훈구 여자후배와 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가 수여되었다.

잔치가 끝날 무렵, 혈액식 비슷한 포도주 나눠마시는 의식을 치르며 들뜬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졌다. 평생동지로 남자는 그런 결의식이었다.

그러나 숙연한 분위기도 잠시 이내 농성장은 난장판이 되었다.

87,88학번은 그간의 상호 대결의식을 털어내고자 알몸으로 춤을 추는 의식을 거행,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대학 여학우는 양군모 사람들 호모 아니냐, 어찌다 그렇게 되었냐며 혀를 찼다고 한다. 그렇게 농성100일의 밤은 깊어갔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후 국방부는 징역 1년 이상 선고자 중 27세 이상 면제, 형기 합산 2년 이상자 면제, 나머지는 보충역으로 처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글을 마치며

글을 쓰면서 놓치고 가는 이야기가 많음을 느꼈다. 지면의 한계도 한계지만 애초 에피소드 위주로 우스갯소리 몇마디 하려고 생각한 터라 풍부한 야사가 되지는 못했다.

양군모 투쟁일지

필자의 단견을 뼈저리게 반성한다. 그리고 뒤로 가면 서 시간에 쫓겨 재미있는 글이 되지 못한 점도 사과드린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이 이를 보완하리라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높아만 보이던 태산에 올랐다. 자부심

도 생기고 자신감도 넘쳐난다. 그러나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피라 했던가! 앞으로 하늘에 올라 조국의 별이 되는 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기대하시라, 양군모의 이후를!

양군모

부록 <양군모 용어정리>

양군모와 친하고 싶으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둬시다!!

- 8 층** : 여의도 백화점 내 당구장,오락실,볼링장이 있는 층
- 김삼만** : 서울시민이 천만인데 유인물 3만장은 뿌려야 한다고 강변한 김상현의 별명.
- 내성적** : 분위기를 못 맞추거나 토라지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
- 니미 십**(경음으로 발음할 것): 징역에서 일반수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소리치는 말인데, 징역에서 품잡느라 한번도 해보지 못한 한을 풀어보기 위해 자주 사용함.
- 델리킷** : 양군모문제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인듯 한데 정확한 뜻은 잘모름.(국방부 인사국장이 즐겨쓰는 말)
- 딜레이** : 질질 끄. 한상태 사무관이 주로 사용함.
- 떡** : ?
- 만세파** : 시도 때도 없이 만세를 부르는 자칭 폐인들의 모임.(김원철,이상봉,유성호)
- 산 초** : 외국인 지원단. 맥시코계(황종득)
- 아군모** : 아들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의 약자. 특별히 조우석 조직 부국장을 가리킬 때 사용. 그는 호적 나이는 29세이지만, 액면(겉모습)은 42세이다.
- 아까비** : 징역을 1년 11개월 살아 한 달 차이로 면제대상에서 빠진 경우를 두고 안타까운 마음에 나온 탄성(비슷한 말: 깻잎 한장 차이)
- 양군모 3색**: 김우색,김색중,색정훈을 가리킴 (김색곤을 포함하면 4색이 됨)
- 오주사** : 오기형 기회실장의 별명. 소주 한 잔이면 난폭한 인간이 된다.
- 원로회의** : 86.85학번들의 모임. (의장:이상원,경남대,85)
- 째 다** : 벽차다.이상봉이 주로 구사하는 단어
- 찰 스** : 외국인 지원단(오인근)
- 풍류계** : 화류계의 독주에 제동을 건 비화류계 87들의 대항조직
- 해보이**: 양군모 허무주의의 일종.(반대말-안해보이)
- 화류계** :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87학번내의 소모임

A.상 반 기

1.태동기 (-93.1.10) - 문민정부, 새로운 시작

- 91년 강집대책위 회원들과 새회원들과의 몇차례 회동
- 92.12.25 경 양군모 결성 결의

2.준비기(1-3월)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 1.10 양군모 결성(윤후사에 사무실 마련)
- 1.20 한겨레 신문 광고('접수를 받습니다')
- 1.25-2.11 각계 원로 서명및 해당자 탄원서 활동
- 2.11 건의서 및 탄원서 제출(대통령 인수위 앞)
- 2.15 '말'지 3월호 기사화
- 2.23 국방부 공개질의서 발송
- 3.3 민자당 국방담당 전문위원 면담
- 3.14 3.6 사면자 중 징집대상자 환영대회(동국대)
- 3.20 병무청 정모과장 면담

3.본격활동기(4-6월) - 총력투쟁,승리의 가능성

- 4.2 병무청 1차 항의방문(50여명 참가)
징모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나 행정적으로는 힘들다"
- 4.15 a.'부당징집 철폐와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청년양심수 결의대회'
(환경운동연합 강당)
- b. 병무청 2차 항의방문(100여명 참가)
병무청장: "이 문제는 개혁에 포함될 수 있다. 병무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 c. 청와대 김영준 교육문화비서관 면담: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 다른 현안이 많으니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일을 요한다"
- 4.19 '월간중앙' '업저버' 5월호 기사화
- 4.20 청와대 청원서 제출 및 수의 행진

- 4.29 a.정성철 제1정무차관 면담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b.정대철 의원 소개로 '현행 병역법 시행령 103조 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수행자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청원서' 제출
- 4.30 5.6월 징집영장 연기를 위한 대표단 10인 병무청 방문
징모과장: "정부의 공식검토 사항이 아니므로 영장연기는 어렵다"
- 5. 3 민주당사 농성 돌입
- 5. 4 김덕규 사무총장 면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우선하겠다"
- 5. 6 국회 청원 국방상임위에 공식상정
- 5. 7 조기영장 발부 철회및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병무청의 노력을 촉구하는 제 3차 항의방문 (150여명 참가). "5.6월 영장발부자의 징집연기조치 하겠다.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겠다"
- 5. 8 a.동아일보 2면 하단광고('새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각계원로및 교수 연명)
b.박계동의원 국회 대정부 질의 사회분야에서 "5.6공 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악용되어온 병역법 시행령 10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
- 5.12 엄삼탁 병무청장 농성장으로 전화 "영장연기 조치는 긍정적 해결의지의 천명임을 알아달라"
- 5.20 민주당 농성 해산
- 5.21 a.국방부 방문(30여명 참가)
인력과장 및 사무관 면담: "국방부 차원에서도 검토중이다."
b.국회 국방위 산하 청원심사소위 개최
임복진의원의 질의에 병무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해결과 행정적 조치를 통한 해결 등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
- 5.25 외국어대 이상준 사범대학장 동아일보 기고
- 5.25-27 한총련 출범식 참가.수익사업
- 5.28 기만적 5.28 가석방 규탄및 수배해제,부당징집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고려대)
- 5.29 신임병무청장 면담
"청원에서 제기한 문제는 과거청산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6. 3 a.'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b. 대상자 20여명 기독교 회관 농성시작 및 병무청앞 선별처리 반대 무기한 평화시위 돌입
c. 조선일보 4면 하단 광고('새정부에 보내는 촉구문')
- 6. 5 KNCC 인권위원회(김찬국 위원장) 명의로 부당징집 철폐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발송
- 6. 8 국회 국방상임위 개최
김광석 청장: "복학생들에 대해서는...우선 영장연기중이며...병역처리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 6.17 대표단 병무청 방문시 징모국장 "선별처리 하겠다고 한 적 없다"고 언급
- 6.18 정무장관실 접촉:"병무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 6.25 a.병무청 징모국장 면담:"여러분의 노력은 헛된 것은 아니고 만족스러울지는 모르나 결과는 있을 것"

b.CBS 방송 "...취재진이 병무청에 확인해본 결과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4.이완기(7-9월) - 끝없는 기다림,승리의 환상

- 7. 3 징모국장 면담
"관계기관(국방부)과의 협이가 쉽지 않다...청장과 장관과의 면담에서 결정될 것이다"
- 7. 6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해찬의원 서면질의
- 7. 7 대표단 병무청 방문
"병무청의 입장은 시행령 개정이다.이 안은 확정적이다.국방부 장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7. 9 정무장관실 전화접촉 "학생들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차관이 말하더라"
- 7.12 정무장관실 면담 "시행령 개정은 확인됐고 구제범위는 복수안일 것"
- 7.15 정무장관실 면담 "학생들 의견 상당히 반영됐다. 100%는 아니나...대략 88년으로 환원...을 여음이 가기전에 해결될 것"
- 7.17 국방위원장 비서관 "국방위원장이 할일은 다했다.장관에게 이야기했다.합리적인 것은 88년 기준밖에 없다고 본다."
- 7.19 병무청 "소급적용없는 시행령 개정이다...장관의 거취와 상관없이 조만간 해결될 것"
- 7.22 정무장관실 "교육문화수석과의 만남에서 양군모문제 얘기했다.잘 알고 있다."
- 7.26 병무청 접촉
"7월 6일 병무청의 확정안을 국방부에 올렸다.이 안은 국회,청와대,정무장관실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다.국방부 실무자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해서 지연되고 있다.학생들의 의견을 80-90% 반영했다."
- 7.27 정무장관실
"약 83% 구제되더라.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나 현역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국회 등 협의해서 한 것이니 실무선에서 되돌리지는 못할 것"
- 7.28 양군모 총회 개최(승리적 분위기에서)
- 8-9월 상근자의 무수한 병무청 방문,"1주일만 기다리면 된다"는 답변 계속
양군모 회원들의 막연한 기다림

B.하 반 기

- 10.8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 답변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으나 일반수와의 형평성등...의 이유로 시행령 개정은 어렵다. 합산 2년 이상의 수행자의 경우 구제를 검토하겠다"

새로운 각오와 출발(10.18-11.15 : KNCC 농성)

- 10.22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징집영장을 병무청에 반납. 노태술,정제원,류지은,윤상국 등 4인의 영장반납투쟁은 양군모의 하반기 투쟁을 열어젖히는 초석의 역할을 함

- 10.25 병무청에서 징집영장을 일괄연기조치 함
- 10.28 임채정의원의 대정부 질의: "시국사범 징집 대상자들이 문민정부하에서 정상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 11.3 신계륜 의원의 국회본회의 사회분야 대정부 질의: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다가 구속되어 뒤늦게 입영을 앞두고 있는 500여 학생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가?" (11.3 중앙일보, 국민일보, 11.4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보도)
- 11.12 신계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 "현재 이와 관련한 청원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므로 결정을 내려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힘
- 11.15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자,민주 양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 하며 민주당사에서 확대농성 돌입. 약 50여명의 회원이 전국 각지에서 결집하여 하반기 양군모 투쟁을 함께 일구어 나갈
- 11.22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 소위: 「병역법 시행령 개정 및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을 위한 청원」에 대해 여야 합의로 의결함
- 11.27 「양군모의 밤」 한양대 조교식당에서 개최. 약 3천여명의 참가하에 성황리에 개최됨. 순수익금 1천만원의 양군모 첫번째 신화를 창조함
- 11.30 「양심수 제자들의 정상적 사회진출을 바라는 서명교수 대표 기자회견」 열림. 총장 11인, 교수 1,350여명의 명단 발표함
- 12.3 국공립 총학장 협의회에서 교육부등에 대한 건의문 채택
- 12.4 대학로에서 약 1천여명의 참가하에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대회'를 개최함. 문익환 목사님, 김재열 신부님 등 각계 원로인사 참가
- 12.6 국방부 앞 출근투쟁을 한달 이상 끈질기게 추진함. 아침 7시 30분부터 국방부 장성들과 직원들의 출근시간에 맞춰 정문앞에서 대형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적게는 40명에서 많을 경우 70여명까지 참가함
- 12.9 a.국회 국방상임위에서 위 「청원」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부의함
b.전국 학생처장단 회의에서 징집문제 해결 건의문 발송 결정
- 12.14 '국회청원 완전수용 촉구대회' 국방부 앞에서 사상최초로 대형스피커를 가지고 300여명의 참가하에 개최함
- 12.17 박홍 서강대 총장님을 비롯한 대교협 총장님 8분의 권영해 전 국방장관 면담, 양심수 제자들의 군문제 해결을 촉구함
- 12.20 '제정사업의 날'로 정해 서울시내 주요대학에 굴판매 사업
- 12.21 오전에는 국방부앞 출근투쟁, 오후에는 명동성당 및 종로거리에서 수의입고 거리시위를 진행함. 피카디리극장앞과 명동 제일백화점 앞에서는 양군모의 사안을 내용으로 한 연극공연도 시도함
- 12.24 '희망만들기'제하의 한겨레 하단 광고
- 12.28 제정사업단 구성으로 이후 양군모 투쟁의 자립자활의 전제마련, 이날부터 풀과 북한술을 판매하면서 농성투쟁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자체활동으로 마련하게 됨

전열을 재정비하여 (94.1.5 -)

- 1.5 a.종교계,여성단체,사회단체 인사 서명돌입
b.전국대학 총학생회장단을 추동하여 국방부 앞으로 양군모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사업을 대대적으

- 로 전개
- 1.7 "18개월 방위안"등이 국방부 실무관료의 입에서 흘러나옴
- 1.18 a.조계사 산중다원에서 서명대표이신 진관스님의 참가하에 기자회견 개최.
b.국방부 정책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집면제는 불가, 18개월 방위안"라는 입장 확립. 양군모에서는 18개월 방위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운다는 조직적 결의확보
- 1.24 서명대표 김재열 신부의 참석하에 세실레스토랑에서 기독교 서명결과 기자회견
- 1.27 민자당 민주계에 대한 적극추동으로 1.27 국방부의 '18개월 방위안'에 대한 일방적 처리기도 무산
- 1.28 '선별처리 반대,18개월 반대 및 국회청원의 완전수용 촉구' 병무청앞 집회개최(약250여명 참가)
- 2.4 김정훈 대표가 'C.B.S의 시사자키'에 출연하여 양군모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 역설함
- 2.16 국방부의 '27세이상자 면제, 그 이하 18개월 방위안'을 기습적으로 언론에 발표
- 2.18 a.민자당 앞 집회: 선별처리 반대와 전원구제의 필요성 주장
b.서울대,동국대,산업대,서울여대 등에서 백남치 의원 앞으로 격려전보 발송
- 2.26 병무청 앞 출근투쟁 전개 (3월 2일까지)
- 2.28 건대에서 회원 전체 총회와 '2차 양군모의 밤'이 개최됨
- 3.3 5일까지 낙산으로 60여명의 회원이 M.T를 떠남
- 3.6 1차로 농성을 해산하고 68년생 중심으로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투쟁전개
- 3.21 양군모 전체총회를 통해 '양군모 동지회(별천지)'결성과 농성해산을 정식으로 선포함



- 현행 병역법 시행령 개정 및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에 관한 -

청원서

수신: 국회

참고: 국회 국방위원회

발신: 양심수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대표 김정훈 외 283명)

청원일자: 1993년 4월 21일

1. 청원의 요지

- ▶ 새정부출범의 밑거름이 되었던 지난 시기 정치적 희생자들에 대한 치유와 사회적 기회제공을 위한 조치가 과거청산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현재 국민들의 지지와 바램속에 전개되고 있는 새정부의 개혁의 전제이자 또다른 과제, 시국관련 수형자(양심수)에 대한 추가 사면복권, 수배해제 및 부당징집의 폐지입니다.
- ▶ 특히,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자의적인 병무행정은 정통성이 결여되었던 과거 군사 통치의 산물입니다.
- ▶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장기적 사회격리차원에서 기능했던 제도적 장치중의 하나가 부당징집제도이며 그 법적 근거는 병역법 시행령 및 병무청의 수형자 처리 기준입니다.
- ▶ 과거청산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부당징집을 폐지하기 위하여 현행 병역법 시행령(89년 3월 25일 개정) 103조를 개정하고 구체적 처리기준으로 「병무청 수형자 처리기준」을 88년 8월 1일자 것으로 환원, 개정하여 시국관련 수형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과거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보충역 편입 선례

	시행년도	소급적용 시기	보충역 편입자 수
1차	80년	76. 7. 10 -- 79. 12. 31	400여 명
2차	84년 3월	80. 5. 17 -- 84. 3월	400여 명
3차	88년	84. 5. 25 -- 88. 7. 30	447명

3. 현행 병역법 개정 및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에 관한 근거

1) 역대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병무행정의 특징

㉞ 과거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병무행정의 특징

▶ 과거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병무행정은 정치수에 대한 장기적 사회격리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의 개정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병역법 시행령 초기세칙은 76년 긴급조치 발효직후, 80년 초, 84년 유화국면, 88년 여소야대 정국초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마다 쉽게 고쳐왔습니다.

둘째: 이종의 사회적 고통인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부당징집 폐지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역대 정권은 80년, 84년, 88년 등 세차례에 걸쳐 당시의 시행령, 시행세칙을 개정, 소급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왔습니다.

유신1기(75년 7월 10일 이전)	6개월이상 실형선고자는 죄질을 불문하고 소집면제
유신2기(75년 7월 10일 이후)	6개월이상 실형선고자 중 대학생은 여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역입영
5공1기(84년 5월 25일 이전)	유신1기와 같음
5공2기(84년 5월 25일 이후)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집시법을 제외한 10개 특별법(국가보안법 포함)위반자는 면제 - 집시법 위반자는 3년이상만 면제
6공1기(88. 8.1 - 89. 3.25)	죄질에 상관없이 1년이상 형 선고자로 2년이상 집행유예자 면제
6공2기(89. 3.25이후 현재)	2년이상의 실형선고자만 면제 - 집행유예자 제외

☞ <별첨자료 3> 「병역법 시행령 개정사」 참고

☞ <별첨자료 4> 「역대 수형자의 병역복무에 관한 기준」 참고

㉞ 현행 병역법 시행령(89년 3월 25일 개정) 및 병무행정의 문제점

▶ 현행 병역법 시행령 개정상의 문제점

첫째: 개정 시기상의 의혹

- 88년 6월 30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불과 7개월만인 89년 3월 25일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같은시기인 3월 25일 공안합수부 설치, 문익환 목사 방북)

☞ <별첨자료 5> 「관보」에 실린 현행 시행령 개정 이유 참고

둘째: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졸속개정의 징표

- 89년 3월 25일 이전 ~ 실형 2년 이상자는 군입대전이나 군입대후에도 보충역에 편입

- 실형 2년 미만자는 군입대전에는 병무청장의 심사에 의해서, 군입대후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심사에 의해서 보충역에 편입

- 89년 3월 25일 이후 ~ 실형 2년 미만자는 군입대전에는 병무청장의 심사규정 삭제로 현역입영하고 군입대후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심사에 의해서 보충역에 편입

☞ <별첨자료 6> 「시행령 103, 104조」 참고

세째: 결국 현행 시행령은 당시 시국관련 구형자에 대한 장기적 사회격리라는 목적하에서 일관성없이 졸속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 현행 병역법 시행령 시행상의 문제점

첫째: 일반 수형자와 시국관련 수형자와의 차별처리

- 병무청의 수형자 처리지침에 의하면 17종의 죄를 위반하여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입영 후순위 처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장기대기 면제제도로 인해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그러나, 시국관련 수형자는 출소직후 영장이 발부되는 등 차별처리 되어왔습니다.

☞ <별첨자료 7> 「병무청 수형자 처리기준」(89.3.25) 참고

둘째: 현행 시행령에 의하면 2년 미만 선고자는 현역으로 입영해야 하는 바 각기 다른 사건으로 1년6월의 형을 두번 받아 도합 3년의 수형생활을 마쳐도 보충역에 편입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세째: 군대내에서의 녹화사업

- 89년 3월 25일 개정 이후에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청년학생들에 대한 장기적 사회격리 차원에서 구조화된 제도적 장치가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수배-구속-징집-녹화사업-의문사」 등 일련의 프로그램은 시국관련 수형자들로 하여금 억울한 기피생활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로인해 89년 이후 2년에서 4년간의 비정상적인 생활이 정권에 의해 강요되어 왔습니다.

㉞ 지난시기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병무행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한 제도적 탄압의 일환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2) 병역의무와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문제 - 합리적 기준의 설정근거

▶ 과거의 정치적 희생을 치유하는 문제와 국방의 의무를 공평히 부담하는 문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 「국민역」 복무에는 제1 국민역과 제2 국민역이 있으며, 제1 국민역에는 현역과 보충역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병역의무의 부담수준에는 대상자의 사회적 처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등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의 문제입니다.

☞ <별첨자료 8> 「국민역 복무의 종류」 참고

▶ 「합리적 기준」 설정의 관건은 지난 시기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사회적 활동이 일반 범법자들의 그것과 달리 새정부출범의 토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영삼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미 언급한 바처럼 "새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라서, 저희들이 지난시기의 시국관련 활동으로 수형생활을 하게 된 것은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희생이자 사회적 고통이었습니다. 89년 3월 25일 이후 저희들이 수배, 구속, 자격정지 등 2년에서 4년간 감내해야만 했던 고통이 결국은 우리사회 전체가 나누어 져야만 했던 고통이었다는 평가가 전제될 때, 병역의무의 상대적 평등 부담의 기준으로서 '과거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유 및 국민화합 조치'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정통성이 취약했던 군사정권에서조차 80년, 84년, 88년 등 세차례에 걸쳐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보충역 편입조치를 취했던 것도 바로 이런 시각하에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4. 보충역 편입 대상자와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방안

1) 보충역 편입 대상자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 사이에 시국관련 사건으로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약 300여 명

☞ <별첨자료 1> 「대상자 명단」 참고

2)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방안

[현행 병역법 시행령]

▶ 제103조 제1항 :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1호와 같다.

- 1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선고받은 자.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자는 제외한다.(1989년 3월 25일 단서 신설)

제2항 : (1989년 3월 25일 삭제)

[개정안]

▶ 제103조 제1항 :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법 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1호와 같다.

- 1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1993년 0월 00일 단서 삭제)

제2항 : 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죄질, 형량, 자질 등을 감안하여 보충역 편입 또는 방위소집 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 부칙 (1993년 0월 00일)

1. 이령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별첨자료 9> 「교육부의 정원령 개정안」 참고

▶ 보충역 편입절차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병무청에서는 88년 8월 1일부터 89년 3월 24일까지 발효했던 수형자 처리 기준을 참고로 시기와 절차를 결정하여 시국관련 수형자들을 포괄적으로 보충역에 편입시킨다.

● 참고자료 - 수형자 처리 예규

(1988. 12. 29 병무청 예규 제2-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사고 예방과 정병육성을 위하여 3년 미만의 수형자에 대한 병역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근거) 병역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3조(수형자의 병역처분 기준) ① 병역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보충역에 편입하고 방위소집을 면제한다.

②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한다. 다만,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다음 기준에 불구하고 선병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
1년 집행유예자 _____ 이상, 현역입영 대상

□ 6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
1년 초과 2년 미만의 집행유예자 _____ 이상, 방위소집 대상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
1년 이상의 형 선고자로서 2년 이상의 집행유예자
소년원 재원 전력자 _____ 이상, 징집-소집면제 대상

1.청원서 제출에서 국회통과까지

청원서

제4조(적용 준칙) ① 선고형량과 집행유예기간에 따른 처분기준 적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영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처분한다.

「예시1」 - 형의 실행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형량에 의거 처분

- 징역 또는 금고 6월 _____ 방위소집 대상
- 징역 또는 금고 1년 _____ 징집-소집면제 대상

「예시2」 - 형의 집행이 유예된 자는 선고 형량과 집행유예기간에 의거 처분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_____ 현역입영 대상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_____ 이상, 방위소집 대상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상 _____ 징집-소집면제 대상

「예시3」 - 사면 또는 감형자는 최초의 선고형량을 기준하여 처분

② 소년원 재원자 및 재원 전력자는 징-소집을 면제처분한다. 그러나, 보호처분, 감호처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비수형 소년범은 선병기준에 따라 정상처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이전 88.8.1 이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은 본 예규에 의거 처리한다.

② 88.7.31 이전 수형자는 종전의 지침에 의거 병역처분하고, 종전의 지침에 따라 입영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본 예규를 적용하여 처분한다.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7-14 3/3
	성 명 : 김성중 외 9인
건 명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청원
소개년월일	1993.4.28
<p>소 개 의 건</p> <p>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부당징집철회 문제는 역대정권에서 민주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함께 제기되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과거청산과 정상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시국관련 제적생들의 복적문제와 함께 이미 80년, 84년, 88년 세차례에 걸쳐 해결된 선례가 있습니다.</p> <p>지난 6공화국이 양산한 시국관련 구속학생들중 약 400여명이 2년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 후 곧 입영해야 합니다. 이들 시국관련 구속학생들 중에는 청주대 백상진씨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실제 복역기간이 2년이상이고도 단일 선고량이 2년미만이라는 이유로 입영해야 하는 사람도 20여명이나 됩니다. 당연히 실행 1년 또는 1년6월을 복역하고도 자격정지 등의 제약을 받은 60여명의 대상자들 또한 입영해야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반면 군복무중인 자가 구속되었을 경우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도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국관련 구속학생들에 대한 편파적 징집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103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p> <p>시국관련 구속학생들이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벌였던 활동은 이제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그 평가가 재시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학생들의 활동은 범죄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국관련 활동으로 구속되었던 학생들 개개인이 받았던 사회적 제약은 사회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p> <p>정부는 정인령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제적생들에 대한 복적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는 바로 시국관련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제거하고 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참여 및 능력 발휘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정당한 조처라고 봅니다.</p> <p>그럼에도 현재 시국관련 구속학생들에 대한 편파적인 징집문제가 현정부 개혁의 시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p> <p>김성중씨(세종대 국문학과 4학년 재학중)가 「병역법시행령103조 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청원」을 청원하는 바 본 의원은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차원에서 위 사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병역법 시행령 103조 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청원」을 국회법 제 123조에 의거 소개합니다.</p>	

소개의원 정대철



임 체정 의원의 질의

— 1993년 10월 28일 정치분야 질의중에서 —

지난 6월 8일 국방위원회에서 병무청장이 “시국사범의 징집문제를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방부의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국사범 징집대상자들이 문민정부 하에서 정상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 신 계륜 의원의 질의

— 1993년 11월 3일 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

군징집 대상 시국학생사범을 과거 청산차원에서 구제하라.

총리에게 묻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유신시대부터 자의적으로 6차례에 걸쳐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을 징집의 굴레에 묶어 두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유화조치를 취할때마다 과거청산 차원에서 시국관련 학생들의 징집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경우가 6공화국 하에서 시국사범으로 형을 살고 현재 입영적령기를 4 - 5년 지난 5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병무청장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방부는 이제 와서 이 학생들을 구제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

법무부가 형식논리를 떠나 90%이상의 시국관련수배자를 수배해제한 조치나, 교육부가 제적생의 복교조치를 과거청산 차원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다가 구속되어 뒤늦게 입영을 앞두고 있는 500여 학생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위의 신계륜 의원의 대정부질의 내용은 11월 3일자 중앙일보, 국민일보와 11월 4일자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11월 3일 신계륜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서가 11월 10일 신계륜 의원실에 도착하였습니다. 답변서는 다음 장에 첨부합니다.

○ 신계륜 議員(民主)

국무총리 답변서

民主化를 위해 앞장섰다가 拘束되어 뒤늦게 入營을 앞두고 있는 500余 學生을 救濟할 用意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現行 兵役法에 2年以上의 實刑 受刑者에 한하여 補充役에 編入하거나 防衛召集을 免除處理하도록

되어 있으며, 時局事犯의 경우에도 同一하게 處理하고 있습니다.

○ 신계륜 議員께서 質疑하신 時局事件과 關聯하여 拘束되었던 學生들의 兵役問題를 救濟하는 問題는

이들 學生들 뿐만 아니라 年間 8千余名에 이르는 一般 刑事犯과 既 服務中인 1萬6千余名의 受刑經歷者와의 衡平 등에 問題가 있어 慎重히 檢討되어야 할것입니다

○ 다만, 현재 이와 관련한 請願이 國會에 繫留中이므로 決定을 내려주시면 필요한 措置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 意見書

請願人들은 '89.3.25부터 '93.2.24사이 集示法 違反等 時局관련 사건으로 2年미만의 刑의 宣告를 받은 受刑者들로서 현행 兵役法施行令 第103條와 兵務廳의 受刑者 處理基準을 '89.3.25 改正 이전인 '88.8.1부터 '89.3.24까지 施行된 내용과 같이 다시 還元改正하여 이들 時局관련 受刑者들을 補充役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趣旨인 바, 지난 時期의 民主化를 위한 時局관련 활동으로 비록 補充役에 編入할 수 있는 2年이상의 實刑宣告者는 아니나 이들은 그동안 手配·拘束·受刑 등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不利益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 과거의 政治的 犧牲에 대한 治癒와 國民和合의 차원에서 國防部에 대하여 이 請願의 趣旨를 긍정적으로 적극 檢討하여 상응한 措置를 취하도록 요구함.

국회청원에 대한 처리의견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 제 103조를 개정하여 '89.3.25~'93.2.24 사이에 형을 선고받은 시국관련 2년 미만 수형자의 징·소집면제 청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조치」를 요구한 국회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거 청원인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를 일괄적인 병역면제 요구로 연결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국민개병주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병역의무의 형평성, 병무행정의 일관성 및 군의 사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특정기간·특정집단만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존중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청원에 대한 처리내용은 수형기간과 취업을 위한 사회복귀연령 등을 고려하여 형기합산 2년 이상 수형자와 1년 이상 형 선고자로서 27세 이후 대학졸업자는 징·소집을 면제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18개월 복무토록 함으로써 청원인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므로 청원인들도 이를 수용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신한국 창조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 기본방침

- 합법적·공개적인 처리가능 방안
-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한 방안
-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

▲ 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기합산 2년 이상자 · 1년 이상 형 선고자로서 27세 이후 대학졸업자 	제 2국민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형 선고자로서 26세 이전 대학졸업자 · 1년 미만 형 선고자 	보충역

▲ 대상인원 판단

확정인원 (207명)	예상인원 (2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국민역 : 120 · 보충역 :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국민역 - 1년 지연시 : $\frac{57}{12}$ ✓ - 2년 " : $\frac{83}{12}$ ✓ - 3년이상 " : 60

※ 2년 이하 지연시 제 2국민역 편입 대상인원
 $120 + 57 + 83 = 260$ 명 (64%)

▲ 기타조치

- 대학제적자중 복학한 자는 29세 까지 졸업가능한 자에 한하여 입영연기 조치
- 기입영 복무중인 자는 본인의 원에 의거 상기 기준을 적용 처리

탄 원 서

수신 :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

1.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 30년간의 군사통치가 막을 내리고 최초의 민간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날 군사통치의 유물을 청산하고 문민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2. 새로운 문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출발은 군사통치에 의해 강요되었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대화합을 이룩하는 것이며 특히 군사통치 하에서 고통당하고 피해를 보았던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문민정부가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3. 평생을 후대양성에 몸바쳐온 교육자로서 적지않은 수의 제자들이 구속, 수배, 제적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4. 특히 현재 구속 중인 학생이나 이미 출소한 학생의 경우 군대 징집문제로 이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창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에 힘쓸 나이에 4-5년간 수형생활과 군대생활로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면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고통과 피해의식에 의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발전이 가로막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포괄적인 국민대화합 조처의 일환으로 시국관련 학생에 대한 관용조처가 있어 왔으며, 문민정치의 새시대를 열어 가는 지금 구속학생을 비롯한 시국관련 학생에 대해 포용력 있는 조처는 국민들의 문민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게 할 것이며 이후 사회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 확신합니다.
6. 법적용의 차원을 떠나서, 인도적 견지와 대화합의 견지에서 이들이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포용력있는 선처를 기대합니다.

건의서

수신: 김영삼 대통령

참조: 정종욱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발신: 청년학생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문민정부를 낳기까지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음의 다양한 권리를 포기한 채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청년학생들의 노고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우리와 함께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들이 빼앗긴 젊음을 되찾고 미래의 이 사회를 책임지고 나갈 기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사회의 임무입니다.

소위 '양심수'라 불리는 시국관련 수형자중 1년 이상 2년 미만의 형선고자는 현행 법상 징집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거 부당하게 수배-구속-투옥등의 고통을 당한 사실과 그 고통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고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징집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이 해방전이나 후나 친일무리들에게 억압을 당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아픔과 상처를 사회가 책임지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참여 원로: 서영훈,강원룡,문익환,김관석,계훈제,김성수,김중배,김현국,백기완,
변형운,송건호,송월주,이돈명,이세중,이효재,한승헌 이상 16명

● 첨부: 각계 원로 건의서및 교수 탄원서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 기독교 성직자 건의문 ●

지난 1993년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굴레를 벗고 개혁과 변화를 위해 진통과 격변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은 많은 국내외적 사건들은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발도 앞서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아직도 과거의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이들은 과거 6공화국 정권하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외쳤다는 이유로 수배-구속-수형생활을 감내해야 했던 소위 양심수 학생들이며 이들의 경우 이미 군입대 적령기를 4-5년 초과하였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또다시 병역의무를 져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많은 인사들로부터 이들에게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회적 용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국,사립을 망라한 대학총장단 및 1300여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구제하자고 나섰고 각계 원로, 사회단체의 대표자들도 이에 호응하여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총리가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직후인 지난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만장일치의 합의로 이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행정부에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시대 뜻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자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이제 조속한 결정만이 필요한 이 때 정부당국이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시가 절박한 해당 젊은이들과 이들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심정은 초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에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젊은 양심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함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함께 하며 조속히 정부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건의문 및 탄원서

양심수 학생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불교인들의 건의문

●부저님의 자비가 새해 은누리에 가득하길 간절히 祝願합니다.●

지난 1993년 우리는 과거의 굴레를 벗고 改革과 變化를 위해 진통과 격변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은 많은 국내외적 사건들은 우리 국민이 和合하고 創意力을 발휘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발도 앞서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아직도 과거의 傷處로 고통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들은 과거 6공화국 정권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외쳤다는 理由로 手配-拘束-囚刑生活를 감내해야 했던 소위 양심수 학생들이며 이들의 경우 이미 군입대 適齡期를 4-5년 초과하였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시기를 놓쳤는데도 또다시 병역의무를 저야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군이 이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본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보다 政治的으로, 思想的으로 적지 않은 압박을 준 事例가 있어 왔음은 周知의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들에게 社會復歸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몇 번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이들에게 정상적인 社會復歸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회적 勇斷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教育界에서는 국,사립을 망라한 대학총장단 및 1300여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구제하자고 나섰고 각계 元老, 社會단체의 代表者들도 이에 호응하여 支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總理가 國會에서 決定을 해주면 措置를 취하겠다고 밝힌 直後인 지난 12월 17일 國會 本會議에서는 與野 滿場一致의 합의로 이들에 대한 徵集免除를 행정부에 促求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 시대 뜻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자 國民들의 바램입니다.

이제 早速한 결정만이 필요한 이 때 政府當局이 차일피일 일정을 늦추면 한시가 절박한 해당 젊은이들과 이들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심정은 초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에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젊은 良心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담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함께 하며 早速히 정부당국이 이에 대한 措置를 취하기를 정중히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 전주교 성직자 건의문 ●

지난 1993년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굴레를 벗고 개혁과 변화를 위해 진통과 격변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은 많은 국내외적 사건들은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발도 앞서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아직도 과거의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이들은 과거 6공화국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외쳤다는 이유로 수배-구속-수형생활을 감내해야 했던 소위 양심수 학생들이며 이들의 경우 이미 군입대 적령기를 4-5년 초과하였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또다시 병역의무를 저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많은 인사들로부터 이들에게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회적 용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국,사립을 망라한 대학총장단 및 1300여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구제하자고 나섰고 각계 원로, 사회단체의 대표자들도 이에 호응하여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총리가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직후인 지난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만장일치의 합의로 이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행정부에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시대 뜻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자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이제 조속한 결정만이 필요한 이 때 정부당국이 공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지 않는다면 한시가 절박한 해당 젊은이들과 이들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심정은 초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에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젊은 양심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함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함께 하며 조속히 정부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2.건의문 및 탄원서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 원불교 건의문 ●

지난 1993년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굴레를 벗고 개혁과 변화를 위해 진통과 격변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은 많은 국내외적 사건들은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발도 앞서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아직도 과거의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이들은 과거 6공화국 정권하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외쳤다는 이유로 수배-구속-수형생활을 감내해야 했던 소위 양심수 학생들이며 이들의 경우 이미 군입대 적령기를 4-5년 초과하였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또다시 병역의무를 져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많은 인사들로부터 이들에게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회적 용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국,사립을 망라한 대학총장단 및 1300여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구제하자고 나섰고 각계 원로, 사회단체의 대표자들도 이에 호응하여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총리가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직후인 지난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만장일치의 합의로 이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행정부에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시대 뜻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자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이제 조속한 결정만이 필요한 이 때 정부당국이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시가 절박한 해당 젊은이들과 이들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심정은 초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에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젊은 양심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함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함께 하며 조속히 정부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국·공립대학교 총장 협의회

702-701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전화 (053)955-5318 /전송 (053)954-6806

문서번호 93-6
시행일자 1993. 12. 13. ()
(경유)
수신 교육부장관
참조

취급		총 장
보관		결재 12.15 총 장 협스
국장		
과장		
주무		
기안		

제목 건의서 제출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93.12.3 - 12.4)에서 논의된 사항을 별첨과 같이 건의하오니
정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건의사항 1부. 끝.

국·공립대학교 총장 협의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건의사항



1. 시국사범 관련 학생 징집문제 (관련부처 : 국방부, 병무청)

가. 시국사범 징집문제 관련 학생현황

- (1) 시국관련 수형자로서 징집 대상인원 : 435명 ('93. 7월 현재)
 - (2) 수형기간의 합산이 2년이상인자 : 13명
 - (3) 징역 1년이상 선고자 : 410명
- (징역 1년이상 선고지로서 집행유예 2년이상인자 포함)

나. 병역법시행령상의 수형자 처리기준 내용

- (1) 현행 ('89.3.25부터) : 2년이상의 징역선고자 병역면제 (집행유예자 제외)
- (2) 증진 ('88.8.1 - '89.3.24) : 1년이상 징역선고자나 1년이상 징역선고자로서 2년이상 집행유예자는 전인 병역 면제조치
- (3) 일반수형자의 경우도 "가"와 같이 적용하고 있음.

다. 건의내용

- (1) 건의안 : "나"의"(2)" 규정을 적용토록조치(병역법시행령 개정) 요망
- (2) 건의사유
 - o 시국관련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
 - o 과거 청산차원 및 인도적 건지에서 구제

탄원서

김영삼 대통령께 드리는 글

문민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깊은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의 국정운영에도 개혁과 신한국 창조의 물결이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과거 5.6공화국의 권위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고 보다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정도에서 권위주의정권으로 말미암아 유린되었던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의 회복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땅에 문민정부가 설 수 있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젊은 학생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에 대한 수배, 구속, 투옥이라는 법적인 처리이외에도 또다시 이들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차원에서 행해진 부당징집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입니다. 5.6공 시절 학생들에 대한 이른바 군능화사업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역대 정권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년수형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조치는 3차례 취한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공안합수부가 발족한 가운데 1989년 3월 25일의 국무회의에서 개악된 병역법 시행령은 2년 이상의 실형 선고자만 병역면제를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약 530명의 젊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얼마전까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무장관실과 병무청, 국회국방위등의 여러 기관에서 1988년에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병역법 시행령을 골자로 한 합의안(그 내용은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사실상학생활동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자는 소집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 마련되어 순조롭게 개정작업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국방부에서 행정상의 이유로 반대하여 이들에 대한 구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6공화국시절의 정치적 희생자들이므로 과거청산 차원에서 구제되는 것이바람직하며 만약 이를 등한시한다면 여전히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을 것이라고 판단합

3. 성명서

현재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530여명은 과거 6공시절 권위주의적 정치를 극복하고 민주 정치를 실현해보려는 소박한 정의감과 양심을 가지고 학생 활동에 참여했다가 수형생활을 경험한 젊은이들입니다. 이제 온 국민이 바라던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갖고 못다한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으며 장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태에서 입대를 하게 된다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기회가 더욱 더 좁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암울했던 과거로 청산하고 화합의 새시대, 신한국 건설에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감히 탄원합니다.

1993년 11월 18일

조선대학교 교수 일동

다시 농성이 들어기며

6공화국 군사통치에 의해 희생되어 부당한 수형생활을 겪고도 다시 군에 징집되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하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부당징집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행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며 활동해왔던 저희 「양심수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이 지난 10월 18일부터 기독교회관 KNOC 인권위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농성은 지난 10월 8일에 있었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천명된 국방부측의 '합산하여 2년 이상의 수형자에 대해서만 병역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과거청산과 국민 대화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물론이고, 문민정치를 내건 새정부의 통치이념에도 어울리지 않는 수구적 시각이라는 저희들 대상자 전원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글은 18일 당일날 저희 「양군모」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을 함의방문하며 전달한 성명서입니다.

국방부의 수구적 태도를 규탄하며 우리는 문민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있을 때까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지난 10월 8일 병무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시행령개정은 국방부 반대로 어렵고 수형기간이 2년 이상인 시국사범의 숫자는 모르나 이들에 대한 구제는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각 언론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여 마치 시국사범에 대한 부당징집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실제 구제검토대상은 530여 시국관련 수형자들중 13명인 3%에 불과하며 (6월 8일 국회에서 병무청장이 밝힌 숫자), 이는 과거청산차원에서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에 대한 구제를 원칙적으로 거부한 국방부 시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530여 청년학생 수형자는 6.8일에 병무청장이 국회에서 밝힌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바로 이것인지, 그리고 문민정부 당국자는 숫자조작까지 하면서 무책임하게 검토한 결과를 발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분노하며, 10월 18일부터 기독교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농성에 들어가며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에 대한 부당징집문제는 과거청산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역대 군사정권이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고자 수배-구속-수형생활

외에도 강제징집 또는 출소 직후 부당징집제도를 이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제징집 또는 부당징집 제도는 때로는 탈법적으로 때로는 자의적 병무법령의 개폐에 근거하여 유지되었으며 시국의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시국사법과 관련한 병무법령이 바뀌어 왔다. 이러한 자의적 병무법령의 개폐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일어났던 80년, 84년, 88년에는 과거의 정치적 희생자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행자들에 대한 병역문제를 해결해왔던 선례도 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문제제기하는 병역법 시행령 103조는 89년 3월 25일 안기부가 주도하는 공안합수부 설치를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여소야대 시절 시행령보다 강화된 것이다. 그 이후 수많은 시국사법이 양산되었으며 이들중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직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될 처지에 놓여있는 530여 청년학생 수행자가 있다. 이들 청년학생 수행자는 3개월에서 3년가량의 부당한 수행생활에 의해 정상적인 학업의 기회를 놓쳤고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군입영 적령기에서 4-5년 이상 경과되어 정상적으로 군복무하기도 벅차거니와 군복무후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 전과와 상관없이 취업연령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문민정부에게 시국관련 청년학생 부당징집의 철회문제는 군사통치시대 탄압도구로 이용되어온 병무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정치적 희생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과거청산의 과제이다.

530여 시국사법에게 부당징집 문제는 꽃같은 20대의 어려웠던 삶을 시대의 아픔으로 접어두고 뒤늦게나마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사회의 울타리 밖에서 어두운 그림자로 살아가느냐의 갈림길에서 맞이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2.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해결의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취임사에서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군사정권과 다른 문민정부의 역할임을 누누히 밝혔다. 530여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행자는 문민정부하에서 군사통치의 잔재인 부당징집이 철폐될 것을 기대하며 지난 3월부터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각계각층에 처지와 주장을 알리고 청원서 제출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교수 종교인등 각계의 많은 호응을 받고 주무관서인 병무청에서도 부당징집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수긍하여 몇가지 긍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즉 지난 5월 7일부터 병무청장은 출소직후 발부되던 영장을 연기시켜 주었고 5월 12일에는 영장연기조치는 부당징집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6월 8일 열린 국방상임위에서 야당의원(정대철, 나병선)질의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병무청장은 답하였다. 그리고 7월 6일 정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 국회국방위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병무청은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병무청등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530여 대상자들에게 큰 기대를 주었고 과거청산차원에서 문민정부가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고 모임은 정부의 해결의지를 신뢰하며 인내심을 갖고 7개월간 기다려 왔다. 그런데 국방부는 병무청이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9월말경 마침내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고, 10월8일 병무청장의 답변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 정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 등은 국방부 반대를 이유로 과거청산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문민정부의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대상자들에게 천명해왔던 해결의지에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한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병무행정 주무관서인 병무청등 관련 정부부서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시국사법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이유를 들어 국방부가 반대함에 따라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어 있다. 국방부가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행자의 병역문제의 해결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군사통치 시절의 법집행이 일반형사범이나 시국사법에게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시국사범만의 구제는 일반수와의 형평성, 또는 군의 사기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역시 80년, 84년, 88년 세차례에 걸친 시국사법 구제선례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결국 시국사법 구제문제는 과거청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에서 우리는 진정한 과거청산에 소극적인 국방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결코 과거청산 및 개혁에 스스로 주도적이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민의 여론에 밀려 지금까지 수동적이고 생색대기식 조치를 취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국민으로 하여금 갖게 한다.

우리는 청년학생 부당징집 문제의 해결이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국방부에서만 유독 과거청산 차원의 과제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결코 국방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

그럼에도 올해안에 과거청산의 과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군사통치 잔재의 청산이 개혁의 전제이고 과거청산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있는 한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행자에 대한 부당징집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또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한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발부되는 징집영장은 정당한 이유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반려할 것이고 각계각층의 지지 지원을 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문민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있을때까지 단합된 의지로 활동할 것이다.

1993. 10. 18.

양심수의 군문치 해결을 위한 모임

농성 11 일째

(기독교 회관 3층 기사편서실

766-8828)

성명서

◆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1. 우리의 문제를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다룰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군사정권과는 다른 문민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우리 530여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은 이러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가식이 아닌 진정한 민주화에 대한 의지로 믿고 수배와 구속으로 얼룩진 지난 20대의 삶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지난 1월부터 '양심수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을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병무청은 지난 7월 6일 정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 국회 국방위 등과의 협의하에 우리들의 요구대로 지난 88년도에 여야합의로 만들어졌던 병역법시행령으로 현행 법령을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던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7일부터는 대상자들에게 발부되던 징집영장을 연기시켜 주면서, 이는 부당징집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긍정적 해결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대상자들은 큰 기대를 안고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문민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무청이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마침내 지난 9월말경 법령개정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방부측의 입장변화에 편승하여 병무청은 530여 대상자 중 겨우 3%에 불과한 수형기간이 2년 이상인 13명만을 구제해주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으로 선회해 버렸다.

우리는 진정한 과거청산에 소극적인 국방부의 모습에 분노하며 개혁의 첫걸음인 군사통치잔재의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에 대한 부당징집문제의 해결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2. 문민정부에서 만큼은 정상적인 사회진출과 생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530여 청년학생 수형자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가량의 부당한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 결과 정상적인 학업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군입영 적령기에서 4-5년 이상 경과되어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기도 벅차거니와 복무 후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 취업연령의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일생에 있어서 귀중한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수배-구속-수형생활로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당징집의 문제는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사회의 울타리 밖에서 어두운 그림자로 살아가느냐의 갈림길에서 맞이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다.

정재원씨(27세)의 경우, 이미 결혼하여 부인이 임신 6개월째인 상황이었다. 병무청장이 지난 5월 국회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였고 병무청, 국회 국방위, 정무장관실 등의 시행령개정 합의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에 그는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가장으로 살아가려는 희망으로 전문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8일 국정감사과정에서 발표된 병무청의 입장에 충격을 받은 그의 부인은 유산을 하였고, 그의 가정은 지금 말로는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좌절에 빠져있다.

노태술씨(28세)의 경우, 1988년 같은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던 학생 대부분은 계약 이전의 시행령으로 구제되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그간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재판을 받던 중에 날아다친 공안정국의 와중에 병역법시행령이 여야의 합의로 개정된 지 7개월만에 다시 개정됨으로써 2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군에 징집되어야만 하는 불공평한 처지에 놓여 있다.

3. 우리는 부당징집에 응할 수 없으며, 징집영장의 일괄연기조치를 요구한다.

국방부가 과거청산과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스스로 주도적이지 못하여 우리 문제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병무청은 우리 대상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징집영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병무청의 태도를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로 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부되고 있는 징집영장이란 과거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제도적 폭력에 다름아니라고 규정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는 대상자들의 의지를 모아 현재까지 발부되어 있는 징집영장은 반납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 발부되는 징집영장 역시도 수령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에겐 국방의무의 신성함에 대해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신성해야 할 병역의 의무가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녹화사업의 대상이나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하는 제도적 도구로 전락해왔었다는 사실 역시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 수형자들은 '단지 [군에 갈 수 없다]는 요구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미려하나마 이땅에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우리들의 삶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을 원하는 것이며, 아울러 부당한 억압이 남겨놓은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으로서 문민정부하에서만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새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문민정부는 지나간 어두웠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이상 정치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귀중한 청춘을 빼앗기는 청년학생들은 없어야 한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에 의해 발생한 불운한 아픔 역시도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문민정부다운 과감한 구제조치를 다시금 새정부에 촉구한다.

1993년 10월 23일

양심수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 성명서 ●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문제를 해결을 위한 민자, 민주 양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1. 빼앗긴 젊음에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회의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어두웠던 지난 군사통치시대의 한가운데에는 오늘과 같은 문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름없는 피와 땀으로 기억되리라 믿으며 살아왔던 많은 청년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억압에 묶여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가량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들 530여 양심수들을 맞이해준 것은 따뜻한 개혁의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9년의 '공안정국'에서 학생운동을 탄압하고자 군사정권에 의해 개악된 병역법은 아직도 버젓히 살아남아 정상적인 학업의 기회를 상실한 아픔을 채 달래지도 못한 이들에게 또다시 가정과 사회로부터 떠날 것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6공화국시기의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 500여명은 수배와 구속으로 얼룩진 지난 20대의 삶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정상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지난 1월부터 「양심수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을 결성하여 각계각층에 자신들의 처지와 주장을 알리고 청와대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 국방부 등은 이제라도 진정한 문민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새정부는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군사정권과는 다른 문민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병무청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대상자들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의 여론을 받아들여 지난 7월 6일 국회 국방상임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88년도에 여야합의로 만들어졌던 병역법시행령으로 현행 법령을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무청이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마침내 지난 10월 8일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였고, 이러한 국방부측의 수구적 입장에 편승하여 병무청측은 530여 대상자 중 겨우 3%에 불과한 13명만에 대한 구제를 검토해보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의 병역문제의 해결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료합니다. 군사통치 시절의 법집행이 일반 형사범이나 시국사범에게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시국사범만의 구제는 일반수와의 형평성, 또는 군 사기의 저하 등을 야기할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수구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있었던 3.6 사면복권조치, 제적학생들의 복적조치는 물론이고 최근에 있었던 수배학생들에 대한 사실상의 수배해제조치와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복교 및 사면복권조치 등 과거청산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청산'과 '진정한 개혁'을 열망하는 국회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방부 등의 행정관료들은 이 사회에서 새정부가 천명한 '과거청산'과 '문민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3. '과거청산'과 '진정한 개혁'
국회가 이에 앞장서야 합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젊은 시절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청년학생 양심수들, 오늘과 같은 문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름없는 피와 땀으로 기억되리라 믿으며 살아왔던 이들이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어두운 그림자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대화합'이라는 새정부의 구호가 정치권에서마저 또한번의 구두선으로 끝난다면 누가 이 시대를 '진정한 개혁의 시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얼마전인 11월 3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의 신계륜의원이 저희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황인성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한 청원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해당 상임위에서)결정을 내려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 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새정부의 개혁조치들을 마무리짓는 의미를 갖는다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청년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징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전체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국방상임위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께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다시한번 정중히 촉구합니다.

1993년 11월 15일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김재열 KNCC 인권위원장)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불교계 330인

성명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은 과거의 상처 자유와 국민 대화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문민 정부가 들어선지 이미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도전해 오고 있는 국제 정세는 우리가 더욱더 응집된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과거의 족쇄에 채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어두웠던 5·6공화국 시절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장기간의 수배-구속의 생활을 감내하며 자신들의 소중한 젊음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들은 또 다시 뒤늦은 병역의무로 인해 다시한번 사회와 장기간 격리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실로 우리 민족의 커다란 손실이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부처님의 정법으로 우리 330여 수행자들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은 바로 이러한 젊은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대화함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는 각계각층의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여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 군이 이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본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보다,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에 병역의무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이들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마련해 주

는 몇 번의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들에게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높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국·사립을 망라한 대학 총장단 및 1300여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섰고, 각계 원로, 사회 단체의 대표자들도 이에 호응하여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총리가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직후인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합의로 이들에 대한 징집 면제를 행정부에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 시대 뜻있는 분들의 한결 같은 생각이자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이에 출가수행자들은 젊은 양심들이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함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함께 하며, 조속히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군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정상적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미 장기간의 수배-구속-수형생활로 말미암아 군입대 적령기를 4-5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도 넘겨 버렸습니다. 또 작년 5월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가 이제 와서 이들에게 또 다시 상당 기간 군복무를 하게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한 청원 취지나 각계 각층의 대표 및 국민들의 요구와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330여 수행자들은 정부가 다소 행정적인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들의 정상적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불기 2538년 1월 18일

불교인권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불교 보현도량 결사회 석림동문회, 승려시인창립준비위원회

성명서

---국방부 인사국 실무자의 무책임한 언사에 분노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개혁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득권층입니다”

문민정부 1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 제 분야에서 심부 깊숙히 병들어 있는 몸을 치유하기 위해 제 살을 깎는 아픔으로 반성에 반성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의 기득권층들은 개혁의 흐름을 거스르고 조직적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일마저 벌여 왔음은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방부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을 우려 반 속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 보았다. 특히 신임장관의 취임 인사말을 접하면서 우리는 장관의 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형식적인 변화보다는 철저한 자성을 통한 스스로의 의식 개혁, 전환을 강조하는 장관의 발언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장관의 말을 휴지 조각으로 구겨버리고 여전히 국민위의 군림자라는 환각속에 빠져 구태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국방부 인사국 실무자의 언사를 접하면서 분노를 넘어 슬픔마저 느끼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가 단순히 일부 사람들의 이기적 발로가 아니라 온 국민의 요구임을 정치, 학계, 종교계 및 사회 제 단체들의 입장 표명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민정부의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 적절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신사협정”등의 표현으로 인사국장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전개하는 국방부앞 시위에 대해 잠정 중지해 줄 것을 요구 하였을 때, 우리는 이를 국방부의

변화된 모습으로 환영하면서 수용하였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따른 국민과 국민의 공복인 국방부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1월 19일 국방부 인력과 실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국방부가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수구적인 태도를 저버리지 못한 것을 보고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상기의 면담과정에서 인력과장관과 사무관은 결정되지 않은 방안이라면서도 18개월 방위를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특히 18개월 방위가 국방부가 내 놓을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최종 결정도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월권적 행위이며,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언사였다.

그리고 며칠전 까지만 해도 인사국장이 “방위는 검토된 바 없다”고 하며 신사협정을 운운하다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방위가 주요 방안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한 국민으로서의 청원인에 대한 우롱이며, 국회의 권고-청원 취지를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국방부 인사국 실무자의 이러한 언사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국회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의 계획적인 거부이며, 이를 국방부 인사국 실무자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청원인들이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인력과에서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 장관과 국민들의 직접적인 대화를 가로막고, 장관의 합리적인 결정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를 우롱하고 각 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국방부 실무자 특히 인사국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개혁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거스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유아기적 의식상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규탄함과 동시에 국회의 청원 취지가 완전히 수용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1994. 1. 20.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3. 성명서

병무청의 책임있는 태도와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국민과 수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에 의해 탄생된 문민정부는, 그 동안 사회 제 분야에서 과거청산과 개혁을 전개해 왔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를 일소하는 한편, 문민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거청산과 국민대화합은 우리가 민족통일과 국제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청산되지 않은 미결과제들이 상당수 남아 있으며, 따라서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문제는 바로 아직 청산되지 않은 미결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이미 지난해 5월 29일 병무청장의 언급 속에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하의 산물로서 문민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것'을 건의하는 교수·총장님의 서명,국회의 권고안,종교계 및 각계 원로인사들의 서명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병무청은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청원의 취지에 어긋나는 선별처리,방위소집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24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합산해서 징역 2년 이상자만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이 답변했던 것에서 한 발자욱도 더 나가지 못한 내용이며, 선별처리의 신호탄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초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들이 3월이나 시행령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했는데 1월달에,그것도 일요일에 서둘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는 데에 우리는 짙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청원을 한 지도 이미 1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조치가 늦어진데 대해 우리는 국방부, 병무청 관리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해 5월 병무청장은 청년학생 양심수의 군문제가 과거청산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정하였습니다.그리고 6월에는 국회상임위에서 시국관련 수형자의 병역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7,8월에는 병무청 실무담당 책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거듭해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병무청장의 약속을 믿고, 결혼과 취직 준비등 사회진출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9월 병무청장은 불과 한두 달 전에 한 약속을 아무런 사과의 말도 없이 인제 그랬느냐는 듯이 빈복하고,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 문제가 과거청산 사안이 아니라 실무 행정적인 문제라고 격하하는 발언을 하며 불가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병무청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태도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청원이 통과된 지금에 와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선별처리,방위소집 등 청원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서서히 선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넘어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병무청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 표현"이라고 한 영장 연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이 청원인 모두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장을 연기 조치한 것은 청원인 모두에 대해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해결을 미루면서 청원인들의 발목을 묶어 두었다가 이제 와서 선별처리를 한다면 청원인들에 대한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처사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병무청 당국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적인 태도를 버리고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 문제에 대해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방침이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행정당국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으리라 짐작하지만, 국민에 복무하는 민주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지 못했기에 정세 변화에 따라 표류했다고 봅니다. 공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며, 국민들에 대한 신성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무청 당국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우리와 약속하고, 또 조치해 온 것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퀘퀘묵은 실무,행정적인 논리, 집행유예자들에 대한 왜곡된 논리로 국회청원에서 확인된 <양심수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대의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중대한 오판이며, 이후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 준 바와같이 병무청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국회의 권고-청원취지를 무시하며, 기만적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호도해 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모든 활동을 전개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1994. 2. 22.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김정훈)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여의도백화점 6층)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기독교성직자 1,517인

聲 明 書

주님의 恩寵 가운데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속에서 출범한 '문민정부'는 變化와 改革이라는 우리 현대사에서 前人未踏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은 군사독재의 잔재를 온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완성인 民族의 和解와 統一로 나아가는데는 아쉬움이 컸던 한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 십년동안 썩어 썩어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 속에서도 온 국민은 새살이 돋아나는 희망과 기쁨을 맛보았으며 그 과정에는 우리사회 깊숙히 뻗어있는 병근을 확인하고 개혁의 어려움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民族의 統一과 世界化로 치달는 큰걸음을 내딛기 위한 새로운 出發點에 섰습니다. 이제 가야흐로 통일한국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국민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없애고 온 국민이 화합하여 나아가갈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위에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여 헤메고 있는 수 많은 어린양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 시기 오늘의 문민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民主主義와 統一을 위해 싸우다 「手配-拘束-受刑」 등의 고통을 당했던 청년학생 양심수 들입니다.

이들은 장기간의 「手配-拘束-受刑」생활로 말미암아 學業의 기회를 놓치고 이미 社會進出의 시기도 놓쳐 버린 처지에서 뒤늦은 兵役義務로 인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안타까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變化와 改革의 文民時代에 이러한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아픔이요,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교수, 총장님을 비롯하여 政治界, 宗教界등 사회各界各層에서 이들이 正常的으로 社會에 復歸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뒤늦게나마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수 차례 확인 되었지만 유례 없는 총장, 교수 등 1,350여분의 서명, 2천여명의 聖職者 서명, 국회의 여,야합의 결의등

은 바로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들을 위해 各別한 措置와 配慮를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봄에는 時局關聯으로 除籍되었던 수 많은 학생들을 一括 復籍시키는 措置를 취했습니다. 또한 時局關聯 수배자들에 대하여 사실상 수배해제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루는 한편,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훌륭한 결단이었으며, 우리 목회자들은 너나 없이 환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請願을 한지도 1년이 되어갑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이들의 청원에 대해 수 차례 肯正的인 答辯을 해왔으며 지금도 檢討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임총리가 “國會에서 決定을 내려주면 필요한 措置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勸告가 있는 지 한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렇다할 조치가 없이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분 일초가 소중한 젊은이들에겐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정부는 青年學生 良心囚의 正常的 社會復歸를 위한 措置를 취함에 있어 國會請願의 趣指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청원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지연되는 관계로 소중한 1년이라는 기간을 소모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 목회자들은 정부가 젊은이 전체를 청원취지에 맞게 포괄적으로 구제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올 해는 주님의 은총안에서 우리 민족의 숙원인 민족통일의 일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改革과 統一의 새로운 歷史의 場이 열 리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정부의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1994년 1월 24일

기독교성직자 1,517인 서명자 일동

4. 언론을 통해 본 양군도 투쟁

왜들 이러는가? 시국관련 복역 학생들이 긴긴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군복무로 끌려가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가? 그들은 이미 국가를 위해서 한 몸 바쳐 기나긴 복역을 마쳤는데, 이제 사회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사회인의 자격을 박탈당 하여야만 하는가?

오늘날 문민정부를 태어나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던가! 그들은 남들처럼 시국에 관련되지 않고 얼마든지 직업기에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 사회의 역군들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들 복역 학생들의 구제에 대한 사회 여론이 일자 병무청측은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병무청장은 7월6일 '합의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의 시대착오

그러나 국방부 실무자들은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시국관



허용을 결정했고, 병무청장은 6월8일에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이들의 병역처리 문제는 국방부, 육군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조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의견표명과 함께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국방위의 정대철 의원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촉구한 데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다.

나는 여기서 국방부 실무자들에게 다시 한번 양심에서 우려나오는 목소리로 말한다. 국민화합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

시국사범 학생들의 끝없는 수난

그들은 분연히 일어서 일신의 안일을 뒤로 하고 군부독재 정치를 물리치고 나라의 문민화로 민주주의를 되찾는 운동을 펼쳐 이른바 '시국사범' 또는 '운동권 학생'이라는 본의 아닌 영예를 안고 그 기나긴 철창신세를 지지 않았던가?

복역된 또다시 군복무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저 방관만 하거나 더 나아가 군부독재와 야합하여 그들을 비난하고만 있지는 않았던가? 그것도 부족해서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과거 부조리와 비리의 잔재들을 청산하여 전국민 화합을 이룩하려는 이 시각에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그들을 또 붙잡아 두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이상준

한국의국어대교수 영어교육학

련 수형자들의 구제에 반대의사를 폈다. 그것은 본말이 뒤바뀐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와는 달리 교육부는 정원령을 개정하여 재적생의 복적을 위해 1987년 7월11일부터 1993년 2월24일 사이에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자에 관한 예외적 복학

들어 고난과 역경을 겪을 대로 겪은 이른바 시국사범들이 사면복권되고 정원령까지 고쳐 그들의 복학을 허용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국방부만이 '형평' 운운하며 '자한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시국사범들의 병역 문제가 5공, 6공을 통하여 정권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잊혀져왔는지, 정권의 편리대로 줄곧 개정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 밑거름이었거늘

왜들 이러는가? 형평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말을 하는가? 자문지답을 하기 바란다. 그들은 얼마나 더 답해야만 형평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았는가? 문민정부의 밑거름에 그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거늘!

中央

독자페이지

1993년 3월 31일

水曜日

(20)

나는 강릉대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작년 12월 현역병 입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가 이번 3월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형자의 경우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군정집이 면제된다. 재판부는 이를 해석하는데 복수형

해 구속된 학생을 강제로 징집하려는 국방부·병무청과 이를 거부하고 개선하려는 양심수들 사이의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병역법 시행령은 수시로 바뀌어 왔던 것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역



취급하는가하면 오히려 시행세칙을 만들어 17종의 일반수형자들은 지휘상의 부담이라는 이유로 입영 순위를 조정하고 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역법은 시국사범들을 집중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탄압의 도구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6공화국 이후 5백여명의 구속학생들이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병역법 시행령 改正을

으로 2년이상을 복역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법해석의 옳고 그름을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나는 병역법 시행령 자체에 문제 소지가 존재하며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홍중원 <강원도강릉시육천동>

시 89년 3월 공안정국에서 개약된 것으로 그동안 많은 양심수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시행령에는 죄질에 상관없이 2년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군정집을 면제시킴으로써 양심수들을 보통의 범죄자로

군대로 끌려 가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양심수들의 20대를 동방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이러한 징집은 신성한 국방의무라기보다는 인권유린이자 과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과거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현위기가 고조된 지금 병역법 시행령에 의한 구속학생들도 개선되어야 할 사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6공화국 시절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구속된 학생들의 군정 집 문제 해결이 대학교수들 및 여·아의원들의 적극 참여로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의국어대 이상준 교수(사범대학장) 등 대학교수들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홍사단 3층 강당에서 '양심수 제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구하는 서명교수 대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회견에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은 이미 병역의무에 못지않은 희생을 치렀으며, 이들의 희생이 민간정부의 출범을 앞당기게 된 것"이라며 "이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게 되면 연령초과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방해당해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달초부터 시작된 대학교수들의 탄원서명운동에는 원주 상지대 김찬국 총장과 성균관대 장을병 총장, 외국어대 이강혁 총장 등 11개 대학 총장을 비롯

양심수 출신 병역 해결 교수·의원들 참여 활기

1천4백여명 서명...국회 정식안건처리

해 전국 48개 대학의 교수 1천3백17명이 참여했다. 또 오는 3일 예정된 국립대학총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이들 시국관련 학생 구속자들의 구제조치를 촉구하는 안건이 올라 있다.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명운동에도 황나주·최형우·강신욱 의원 등 민주당 32명과 이기택 대표, 김원기·정대철·이부영 의원 등 민주당 93명 및 무소속 등을 망라해 모두 1백3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국회 국방위도 최근 청원심사 소위를 열어 '병역법시행령 개정 및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 보충역 편입에 관한 청원'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상임위 의결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황인성 국무총리도

이달초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과정에서 "국회 계류중인 청원에 대해 여야 합의로 결정을 내려 주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현재 이들 학생 가운데 10여명에게 이미 징집영장이 발부됐으나 이들이 영장을 반납하는 등 강력히 항의해 연기된 상태다.

이들 대부분은 1년 안팎의 실형과 징기간에 걸친 수배생활로 입대 적령보다 4~5살 많으며, 일부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어 징집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형편이다.

정아무개(27)씨의 경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인이 충격으로 유산하기도 했으며, 농촌을 지키겠다고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던 유아무개(27)씨는 뒤늦은 입대로 농촌 정착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압당한 처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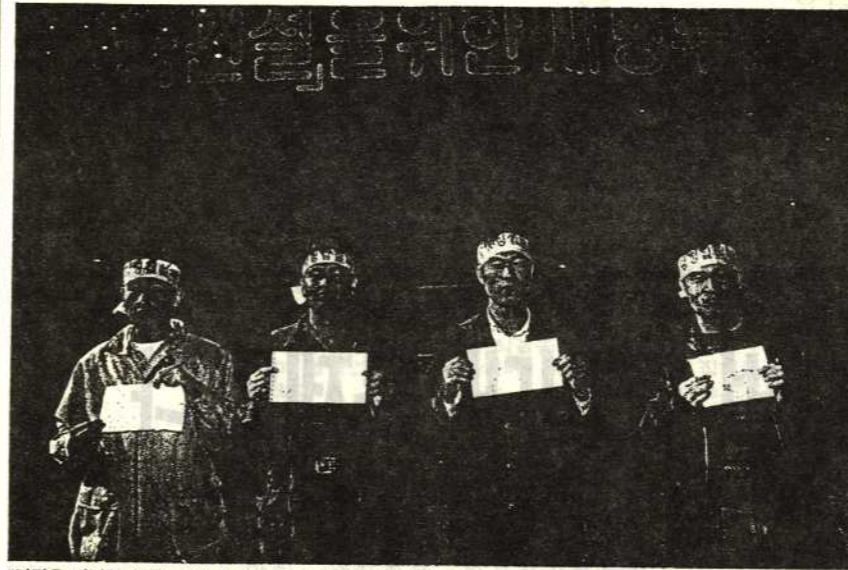
학생운동 관련 구속자들은 그동안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양심수들의 병역문제를 '과거청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선처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특히 "군사정권이 그동안 학생들의 민주화운동 참여를 막기 위해 6차례나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지난 88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 공안정국 아래에서 실종된 개정안 수준으로 법령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시국사건과 관련해 징역1년 또는 집행유예 2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법령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체 수형기간이 2년 이상인 13명에 대해서만 구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박중언 기자



“영장을 반납합니다” :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이들은 군 입대를 거부하고 있다.

는 학생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군대에 가라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새 정부 출범후 사면 복권되어 사회에 나온 친구들은 아직 '징역'도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모임 대표 김정훈씨의 말이다. 오랜 수배 생활 끝에 검거되어 수형 생활을 한 후 군에 입대하는 행로는 80년대 학생 운동가들이 밟아온 전형적인 길이었다. 20대 청춘의 절반을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흘려보낸 셈이다.

정부가 양심수들의 군 문제를 해결해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88년 8월1일 정부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징집을 면제해 주었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방위 소집 대상이 되도록 했다. 여기에 6개월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아 혜택을 받지 못한 시국사범들이 부당 징집 반대운동을 벌인 결과, 정부는 대상자 4백83명 가운데 4백47명을 방위소집으로 바꾸어 주었다.

“내 청춘은 어떡하라고?”

‘양심수 군 문제 해결 모임’ 5백여명, 징집 명령에 반발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병무행정 당국이 내린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서울대 사회학과 졸업)에 속한 5백여 명의 젊은이들.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따르려는 것은, 적어도 이들에게는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6공화국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각종 사건으로 복역한 이들은 대개 20대 중·후반이고 군대에 다녀오면 취업 연령을 넘어선다는 점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막막함이 국가 권력에 대한 또 한번의 도전을 부추긴 것이다.

한편, 병무청을 빠져나갔다. 병무청으로서도 건군 이래 처음 겪는 일이다. 더구나 영장 반납이라는 행정 절차 자체가 없는 터여서 병무청으로서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셈인데, 결국 궁여지책으로 이들의 영장에 대기업 입사원서를 첨부해 입영 연기 처리하고 말았다.

올해 1월 모임을 결성한 이들은 벌써 10개월 남짓 지루한 싸움을 벌여왔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들의 문제가 거론되었고, 병무청도 한때 전향적으로 해결할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 실무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어서 이들의 운명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전한국의국어대 총학생회장 정재원씨(27)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존 문제가 해결될 듯하다 무산되기를 거듭하는 도중에 부인이 충격을 받아 유산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병역법 시행령은, 공안 정국이었다던 89년 3월25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징집 면제 대상이 되도록 바뀌었다. 지금은 이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다. 사실 학생운동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웬만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89년 3월25일 이후에는 학생운동권에 대해 군대가 감옥보다 더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용해온 것이다.

이들의 딱한 사정은 대학 교수와 총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움직였다. 서강대 박홍 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수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탄원했으며, 1백여 국회의원이 이들의 군 징집 면제를 호소하는 데 서명했다. 종교계와 재야 인사들도 이들의 형편을 동정하고 나섰다. 점차 이 문제가 사회 여론화하자 황인성 국무총리도 11월3일 정기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병역 의무를 강조할 것인지, 이제 정치적 결정만 남아 있다.

일부는 영장 반납... 정치적 결단만 남아

얼핏 보면 군대 안 가겠다고 떼쓰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뚜렷하고도 결박한 입영 거부 논리를 갖추고 있다. "김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새 정부가 탄생하기까지에

吳民秀 기자

4. 언론을 통해 본 양군도 투쟁

사적

내·외·정·국

1989년 11월 25일-12월 1일 제8호 15

시국사범 군입대 문제있다

적령기 지나 복무... 제대후 사회진출도 장애

노태우씨(28)는 지난 88년 11월 동료 13명과 함께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노씨를 제외한 동료 12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노씨는 1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함소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하였다.

먼저 나온 동료들은 당시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노씨는 병역법시행령이 2년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징집면제하도록 바뀐 탓에 현역입영 명령을 받게 되었다.

받아야 징집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씨나 백씨와 같이 시국사건으로 수행생활후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양심수들은 전국적으로 5백3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1월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도 회장 김정훈)을 결성하여 관계기관에 '양심수의 부당징집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10월 18일부터는 기독교회관에서, 이튿날 15일부터는 민주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행 병역법시행령 10조는 89년 봄 공안정국을 틈타 개악된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악용 시국사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훈 회장은 "우리는 과거 헌법의 선고에 2년 이상의 실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입영대상자 대부분이 입영적령기에서 4.5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군복무가 어려운 편이나 제대 후에는 이미 취업연령의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우려에 처해있다.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문명정부라면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시국사범 수행자들이 국방부 앞에서 부당징집철폐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3년3개월 징역끝에 군입대

백상진씨(27)는 두차례에 걸쳐 총 3년3개월의 징역을 살고도 징집명령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이 총수형기간에 관계 없이 헌법의 선고에 2년 이상의 실형을

수행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이내 금고형을 선고받은 국가보안법등 10개 특별법 위반자 면제(집시법 위반자는 3년이상만 면제)

시행령개정 국방부만 반대

시행령개정에 대해 현재 여야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부서인 병무청도 지난 7월 1년 이상 선고받은 수행자제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취함으로써 병무청의 개정안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구치소에서 징집명장 받기도

역대 군사정권이 시국사범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기 위해 강제징집등을 이용하여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이에 대한 정치적 반성이 이루어질 때마다 시국사범 수행자에 대해서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80년, 84년, 88년 세차례 이들을 소급적으로 보충역에 편입시킨 것이 그것이다.

회사원 박형재씨(28)는 "군입대나 시국사범 수행생활이나 정출을 조국에 바친 것은 마찬가지"라며 "퇴역에 의해 감옥살이 하고 또 군대에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박형재 기자)

병역법 시행령 및 예규 변화과정	5 회	6 회
84.15월25일 이전	6개월이상 실형선고자는 죄질을 불문하고 소집면제	3년미만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국가보안법등 10개 특별법 위반자 면제(집시법 위반자는 3년이상만 면제)
84.15월25일 이후	최집에 상관없이 1년이상 형 선고자로 2년이상 집행유예자 면제	2년이상 실형선고자면 면제(집행유예자 제외)

형평성문제에 대해 양군도는 "시국사범에 대한 수배체제가 과거 군사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당연한 해결인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수들의 군복역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수형자·시국사범수형자 구별없이 2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자만 징집면제를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병무청의 수행자처리 지침에 의하면 일반수형자는 입영후순위로 분류돼 있어 대부분의 일반수형자는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도 결국 장기대기 면제제도에 의해 징집이 면제되고 있다.

반면 시국사범수형자는 출소 직후로 입영일자가 잡히는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는 출소전에 미리 영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김근래씨(26)는 91년 1년 6개월의 징역후 결핵성농막염이 걸린상태로 출소하자마자 징집영장이 나왔다. 이후 병역기피자로 수배를 받았던 중 금년 9월 복학하던 수배가 풀린다는 병무청 모국장의 말을 듣고 경찰에 출두했다가 구속되었다.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회원들과 가족들이 병역법개정을 촉구하며 11월 25일 양군도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金正浩 기자]

6. 시국사범 관련 복역학생 군입집 재결토를

해당자 5백명명... 복무면제 징집명령 면제

모임결성 "탄압청산 차원 법적정당성" 탄압

이 모임(회장 박형재·총무 박상진)은 시국사범수형자 5백명명... 복무면제 징집명령 면제... 모임결성 "탄압청산 차원 법적정당성" 탄압... 이 모임(회장 박형재·총무 박상진)은 시국사범수형자 5백명명... 복무면제 징집명령 면제... 모임결성 "탄압청산 차원 법적정당성" 탄압...



이 모임(회장 박형재·총무 박상진)은 시국사범수형자 5백명명... 복무면제 징집명령 면제... 모임결성 "탄압청산 차원 법적정당성" 탄압... 이 모임(회장 박형재·총무 박상진)은 시국사범수형자 5백명명... 복무면제 징집명령 면제... 모임결성 "탄압청산 차원 법적정당성" 탄압...

해동부교. 1. 24.

“시국관련 양심수 군문제 해결하라”

불교계, 양심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대정부 성명 발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진관스님, 김재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산중다원에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대표 김정훈) 소속 10여명이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진관스님은 성명서에서 「지난 시절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장기간의 수배·구속생활을 감내

하며 소중한 젊음을 바쳐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이들은 뒤늦은 병역의무로 인해 재차 사회와 장기간 격리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제 정부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불교인권위, 실천불교승가회, 한국불교보현도량결사회, 석림동문회, 승려시민

창립준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는데, 양군모의 김정훈대표는 「오늘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우리가 요구한 병역법 시행령개정안 수용여부와 특별조치 형식의 해결방안의 논의가 있을 것」이며, 「만약 정부가 시행령 요구안 불가 방침을 고수하거나 학생 양심수들을 보충역으로 돌리는 법안을 만드는 조치를 취한다면 계속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9면)

“양심수 보충역 편입” 촉구

교계 3백여 승려 성명 병역의무로 사회복귀 애로

“과거청산 정부가 나서야”

불교인권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보현도량, 석림동문회, 승려시민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 18일 초계사내 산중다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5. 6공시절 젊은이들이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장기간 수배, 구속의 생활을 감내하며 자신들의 젊음을 바쳐 왔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 다시 뒤늦은 병역의 의무로 인해 다시 사회와 장기간 격리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히고 정부에 대해 “이들의 정상적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시국관련 수행자로서 징집대상인원은 4백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과거 청산차원 및 인도

적 견지에서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종교계, 국회, 대학총학생협의회 등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병역법 시행령 개정 및 시국관련 수행자의 보충역 편입을 위한 청원안이 구급 17일 통과 됐으나 아직 정부의 조치는 없는 상태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 참여한 스님은, 석주, 수산, 화산, 월주, 지선, 진관스님등 3백30여명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이날 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채택하고 “청년 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용당한 조치를 정부가 미루고 있는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의 구제야말로 과거청산과 인력을 소중히 생각하는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혁 이뤄달라

유인물·꽃 전달

경북련은 이와관련 ▲총무원과 중무원장의 전황을 견제하고 중회의원의 결집이 불가능하도록 중원중법을 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4.연론을 통해 본 양군모 투쟁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 주장 지난 14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 정문 앞에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 김승훈 신부, 김재열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주최로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를 위한 총리약속 이행과 국방부 결단 촉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전국 각 대학 신행 양심수 및 관계가족 1백여명이 동참했다.



“부당징집”항의 6공 당시 시국관련 구속학생들이 2일 오후 서울 후암동 병무청사에서 병무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국관련으로 형기를 마친 뒤 곧이어 군에 징집됨으로써 장기간 사회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불이익 해소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변재성 기자

4. 언론을 통해 본 양군모 투쟁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1.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1월 23일 오전 11시 병무청을 방문해 입영영장을 반납하고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영장발부를 일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완호 기자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1월 23일 오전 11시 병무청을 방문해 입영영장을 반납하고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영장발부를 일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완호 기자



입영영장 반납...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회원 노태술(27)씨 등 4명이 23일 오전 11시 병무청을 방문해 입영영장을 반납하고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영장발부를 일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완호 기자

1994년 1월 30일(일요일)

**시국사범 징집면제 촉구
각교단 성직자 2천명 서명**

6공화국 시절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시국사범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군집문제 해결에 종교인들이 나섰다.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등 각 교단의 성직자 2천여명은 최근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진 신부)의 서명운동에 참여, "과거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희생당한 점들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부와 국방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징집대상자는 5백33명이나 국방부는 이중 합산해서 2년 이상을 수형한 12명만 징집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달 초부터 23일까지 계속된 서명운동에는 姜萬一 주교(서울대교구) 등 가톨릭 성직자 1백75명, 宋月珠 스님(불교 인권위원회 대표) 등 불교 인사 3백여명, 姜元龍 목사(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 金成洙 주교(성공회) 등 개신교 1천5백여명, 반진규 교령(천도교 중앙총부 총무원장) 등 천도교 7명, 김대선 교무(원불교 서울 사무소) 등 원불교 1백26명, 윤정모씨(소실가) 등 여성계 81명이 참여했다.

양심수 부당징집 하지말라
종교인 서명장점 착수

가톨릭과 개신교 등 종교인들이 양심수 부당징집을 막기 위해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1월 23일 오전 11시 병무청을 방문해 입영영장을 반납하고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영장발부를 일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완호 기자

시국사범 병영면제대상 확대

새정부 출범전 2년미만 실행자 포함

1/29 서

새정부 출범전 2년미만 실행자 포함

시국사범 병영면제대상 확대

새정부 출범전 2년미만 실행자 포함

1.25하. 한석제
 시국수형자 징집면제 촉구
 '양심수 사회복귀 모임'
 강원동 목사 등 1천5백17명으로 구성된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촉구하는 기독교성직자 모임'(대표 김재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주임신부)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6공화국 시절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징집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 징집철회 촉구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1월 23일 오전 11시 병무청을 방문해 입영영장을 반납하고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영장발부를 일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완호 기자

사면복권 되고도 基本權 제약

관용 허용뿐... 舊習 그대로 취업 힘들고 女권 안내취

사면복권된 20만 명이 사회에 복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사면복권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면복권자의 취업과 사회적응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용과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취업 시장에서 사면복권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또한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특히 여성 사면복권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또한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특히 여성 사면복권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또한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풀려난 時局사범 前歴에 "발 쫓김"

풀려난 時局사범의 전과(前歴)가 취업과 사회적응에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사면복권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면복권자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사면복권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또한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특히 여성 사면복권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또한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2년이상 受刑者나 1년이상 刑선고자 4월부터 징소집 면제

사면복권제정 4백7명 발표
이른바 '2년이상 受刑者'나 '1년이상 刑선고자'에 대한 징소집 면제 대상이 4월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17일 발표한 사면복권제정 4백7명 명단에서 이 두 범주를 포함하는 1,500여 명이 징소집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사면복권자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년이상 受刑者나 1년이상 刑선고자 징소집 면제 확대

이른바 '2년이상 受刑者'나 '1년이상 刑선고자'에 대한 징소집 면제 대상이 4월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17일 발표한 사면복권제정 4백7명 명단에서 이 두 범주를 포함하는 1,500여 명이 징소집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사면복권자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국사범 兵役면제 확대

형선기종 2년이상 受刑者 百20명 免召
국방부는 16일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사범 등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병역 처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처리기준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만 27살 이상인 사람은 현행 2년 이상의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징소집을 면제해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만 26살 이하인 사람과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보충역에 편입시켜 복무하도록 했다.

2년이상 受刑者나 1년이상 刑선고자 징소집 면제 확대

이른바 '2년이상 受刑者'나 '1년이상 刑선고자'에 대한 징소집 면제 대상이 4월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17일 발표한 사면복권제정 4백7명 명단에서 이 두 범주를 포함하는 1,500여 명이 징소집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사면복권자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형 1년 넘게 받은 시국사범 현역 면제

국방부는 16일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사범 등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병역 처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처리기준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만 27살 이상인 사람은 현행 2년 이상의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징소집을 면제해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만 26살 이하인 사람과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보충역에 편입시켜 복무하도록 했다.

“大學生 강제入營 없애라”

국회 학생질의·답변 「指導휴 학제」도 是正 촉구.

教育稅 時限 연장 고려안 해 入隊 대학生 死亡說「모른다」

답 변

【서울 8일 특파원 보도】 국회 학생질의·답변 「指導휴 학제」도 是正 촉구. 「入隊 대학生 死亡說」은 「모른다」고 밝혔다.

국회 학생질의·답변 「指導휴 학제」도 是正 촉구. 「入隊 대학生 死亡說」은 「모른다」고 밝혔다.

국회 학생질의·답변 「指導휴 학제」도 是正 촉구. 「入隊 대학生 死亡說」은 「모른다」고 밝혔다.

국회 학생질의·답변 「指導휴 학제」도 是正 촉구. 「入隊 대학生 死亡說」은 「모른다」고 밝혔다.

국회 학생질의·답변 「指導휴 학제」도 是正 촉구. 「入隊 대학生 死亡說」은 「모른다」고 밝혔다.

국회 학생질의·답변 「指導휴 학제」도 是正 촉구. 「入隊 대학生 死亡說」은 「모른다」고 밝혔다.

국회 학생질의·답변 「指導휴 학제」도 是正 촉구. 「入隊 대학生 死亡說」은 「모른다」고 밝혔다.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소식

발행처: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6층 ☎784-4665 FAX)784-4666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수형 제자들의 징집면제 건의

과거청산과 인도적 견지에서 교육부와 병무당국에

지난 3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김익동 경북대총장)에서는 시국 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의 징집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와 병무행정당국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 4일자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

의 기사에 따르면 채택될 건의문에는 과거 군사정권 당시 시국관련으로 구속되어 1년 이상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2년 이상 선고받은 제자들에게 포괄적인 구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 말쯤에 작성되어 당국에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

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희집 고려대 총장)에도 이 내용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의 결정은 과거청산과 인도적 차원에서 제자들의 정당한 사회복귀를 바라는 총장님들의 대승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서명교수 대표 기자회견 열려

한국의국어대 이상준 교수님(사범대학장) 등 대학교수님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홍사단 3층강당에서 「양심수 제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구하는 서명교수 대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관련 학생구속자 530여명의 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교수님들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은 이미 병역의무에 못지않

은 희생을 치렀으며, 이들의 희생이 민간정부의 출범을 앞당기게 된 것」이라며 「이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게 되면 연령 초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봉쇄당해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들의 구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서명교수님들의 명단에는 상지대 김찬국 총장님과 성균관대 장을병 총장님, 한국의국어대 이강혁 총

장님 등 전국 11개 대학 총장님을 비롯하여 총 48개 대학의 교수님 1천3백28명과 함께 황낙주, 최형우, 강신욱 의원 등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 32명과 이기택 대표, 김원기, 이부영, 정대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3명 및 김동길 대표 등 국민당 의원 4명과 이종찬, 양순직 의원 등 무소속 등을 망라해 총 135명의 의원이 들어있습니다.

청년학생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회, 사회복귀를 위한 건의·탄원

(대구대 17명) 고인식, 권여상, 김문복, 김병호, 박정규, 서병석, 안영범, 안영근, 오성태, 오세영, 윤억영, 이영태, 이상현, 최병우, 공복희, 송승민

(울주대 10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경북대 13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경남대 11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청대 9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남대 8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북대 7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안대 6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서대 5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북대 4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남대 3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안대 2명) 김희수, 김희수

(충서대 1명) 김희수

(대구대 17명) 고인식, 권여상, 김문복, 김병호, 박정규, 서병석, 안영범, 안영근, 오성태, 오세영, 윤억영, 이영태, 이상현, 최병우, 공복희, 송승민

(울주대 10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경북대 13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경남대 11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청대 9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남대 8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북대 7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안대 6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서대 5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북대 4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남대 3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충안대 2명) 김희수, 김희수

(충서대 1명) 김희수

활동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 (인학대 28명) 국승욱, 김광민, 김문복, 김병호, 김경, 김영규, 김영민, 김영호, 김용성, 김우진, 김관권, 민병희, 박정규, 송승민, 신봉호, 양숙영, 윤진희, 이상규(이아과), 이상규(외계), 임명범, 정성익, 정영태, 정재훈, 정약성, 최세진, 최인희, 최영국, 홍승룡
- (전남대 13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 (경북대 12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 (경남대 11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 (충청대 9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 (충남대 8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 (충북대 7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 (충안대 6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 (충서대 5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 (충북대 4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 (충남대 3명)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 (충안대 2명) 김희수, 김희수
- (충서대 1명) 김희수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1년! 무척이나 추웠던 국방부 앞 출근투쟁이 기억납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얼어붙게 하는 여의도 바람을 맞으며 대방역까지 달려가던 동지들의 얼굴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선 어린 아이 마냥 상기된 얼굴로, 들뜬 마음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군문제를 해결하고 민중 속에서 민중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그날의 다짐이 변치않기 위하여 항상 혁신할 것입니다.

청년학생양심수

양심수 자료집

1994 · 봄

■ 엮은 이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편 집 부

■ 발행인 / 김 정 훈

■ 발 행 / 1994년 4월

1년!
무척이나 추웠던 국방부 앞 출근투쟁이 기억납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얼어붙게 하는 여의도 바람을 맞으며 대방역까지 달려가던 동지들의 얼굴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선 어린 아이 마냥 상기된 얼굴로, 들뜬 마음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군문제를 해결하고 민중 속에서 민중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그날의 다짐이 변치않기 위하여 항상 혁신할 것입니다.

자료집이 나오기 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